

MB 정부 2년의 경제운용 성과와 향후 방향 *

이 종 욱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서 론

기업 CEO의 경영스타일이 한 기업의 성장과 쇠퇴를 좌우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들이 드물 것이다. 기업에서는 CEO가 잘 못하면 망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래서 국가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는 드물지만, 기업의 평균 수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고, 경영학은 바로 기업의 수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경제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응을 역설적으로 설명 해 보면, 대통령이 잘못해도 국가는 쉽게 망하지 않고, 대통령이 잘 못해도 국가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통령에 비교할 권한이 없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위해 하는 역할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구나 다음 선거에서 훌륭한 대통령이 등장하면 국가를 재건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 국가 전체의 모든 구성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국가성장의 중요한 요인인데 (Landes, 1998), 한 국가의 대통령은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한국경제가 1980년대 일본경제와 닮았다’라는 일본 증권 회사의 보고서에서 나온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경제의 운영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의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이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가경제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

* 한국경제학회와 미래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2010년 4월 26일에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발표될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조장욱 교수, 강석훈 교수, 전성인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가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도 가장 궁금한 질문 가운데 하나이다.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초반전에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실행력도 아주 높다. 여기에 리더쉽까지 갖추게 되면, 그 실행력은 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초기 정책 운용 과정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은 대통령 개인의 리더쉽과 능력을 가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기대의 방향과 크기도 결정된다. 보좌관, 공기업 등의 임원 선발 및 배치를 통해서도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 모든 국민의 눈에 대통령의 행동과 의사결정 과정이 직·간접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조실록으로 보면, 과거 임금의 일상생활은 지금 보다 훨씬 더 투명하였다.

초기 2년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 실체를 보게 된다. 반면 대통령 임기의 후반으로 가면, 소위 레임덕도 있어, 대통령의 실행력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기 2년의 리더쉽 성과가 좋다면 경로의존성에 따른 자기강화(self-fulfilling) 작용을 통해 나머지 임기 동안 성과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경제는 항상 동태적 경로를 따라 변화하므로 정태적 효율적 기준이 성립하지 않고, 오히려 비효율성이 경제성장 경로를 결정한다(David, 1983; North, 1991). 또한 경제는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을 통해 기적을 만들게 되므로(Lucas, 1993), 대통령의 2년의 경험 리더쉽도 중요하다.

이러한 대통령 임기 동안의 기간별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해 본다면, 집권 초기 2년이 짧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의 경제운영 방향과 성과가 나머지 임기 동안의 경제성과의 방향을 좌우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MB정부 2년 동안의 경제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방향을 진단하며, MB 정부의 성공을 통한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5개 절로 구성되며, 2절에서는 경기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본 연구 과제의 시사점을 정리하게 된다. 제3절은 금융위기 전개와 인식 시차에 대한 논의를 통해, 경제위기가 전개되는 실제 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가들과 정부 정책 당국자간 인식 시차를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책당국자들이 국가경제의 현장 정보에 가까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제4절은 MB 정부 2년 동안의 경제 지표 변화를 보고, 금융위기 극복과정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 기간이 짧아 통계적 분석 보다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에 중점을 두게 된다. 5장에서는 제4장에서 논의된 그래프 분석을 통해 MB정부의 성과를 정리해 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2장 -5장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MB 정부 2년의 성과를 요약하고, MB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과제로 고려될 중요한 내용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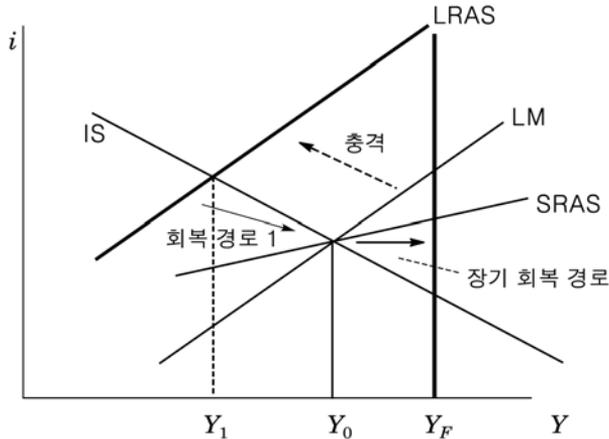
2.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적인 노력으로 탄생한 학문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Lucas, 2003). 이 학문은 경제적 재앙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 기술(knowledge and expertise)의 체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은 불황 예방의 핵심적 문제들을 지난 수십년 동안 실제적으로 해결하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¹⁾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립적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그림 1>에서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경제는 장기공급곡선(LRAS) 상의 한 점에 있게 된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단기공급곡선(SRAS)상에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장기경제성장의 원천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잘 알려진 리카도등치이론으로 보면 재정적자에 의한 경제안정화 정책에도 한계가 있지만, 더 나은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재정정책은 지출 흐름의 변화에 대한 ‘절묘한 조정(fine-tuning)’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나은 근로 유인 그리고 저축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 경제정책의 기초 분석틀



<그림 1>과 같은 경제안정화 정책이 지속되어 온 미국경제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Lucas(2003)는 간단한 모형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모형의 결과는 한국경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어, 간단히 결과만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1) 경제정책은 경제 지식 수준의 발달에 따라 그 정치함도 달라진다(Romer & Romer, 2002).

Lucas(2003)는 국민들의 고정상대위험회피(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CRRA) 형태의 대표자 동태적 기대효용함수로 (1) 식을 가정하여 후생이익의 결정방정식을 유도하게 된다.

$$E \sum_{t=0}^{\infty} \beta^t \frac{((1+\lambda) C_t)^{1-\gamma}}{1-\gamma} \quad (1)$$

위 식에서 소비는 $C_t = A e^{\mu t} e^{-(1/2)\sigma^2} \varepsilon_t$ 로 가정되며, ε_t 는 로그정규분포를 갖는 오차항으로 가정한다. 여기서 λ 는 소비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얻게 되는 후생이고, σ^2 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험의 양이고, γ 는 이러한 위험을 취하는 사람들의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낸다.

(1) 식에서 유도한 후생이익 크기는 (2) 식에 의해 결정된다.

$$\lambda \cong \frac{1}{2} \gamma \sigma^2 \quad (2)$$

그리고 CRRA 선호함수에서 그 경제의 자본평균수익율(r)의 결정방정식은 (3) 식과 같다.

$$r = \rho + \gamma g \quad (3)$$

여기서 γ 와 ρ 는 각각 위험회피 계수, 주관적 할인율이고, g 는 소비증가율이다. (3) 식에서 소비성장율, 위험회피도, 주관적 할인율 등이 자본수익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위험회피적인 행동에 집중할 때, 소비증가율이 증가할 때, 그리고 주관적 할인율이 높을 때, 자본평균수익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어느 정도 위험을 선호하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위험회피적 행위 선호도 감소하여 자본평균수익율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미래 전망이 밝지 않으면, 주관적 할인율도 높아지고 미래 수익흐름의 현재가치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3) 식에서 미래를 밝게 전망하여, 미래 수익 흐름에 대한 할인율이 낮을 수록 자본평균수익율도 낮아진다.

Lucas(1987)는 단순한 가정을 기초로 한 모형을 이용해 경제안정화 정책의 후생이익을 소비로 측정해 보면 아주 적은 소비의 0.1%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제성과를 벤치마크로 분석해 보면, 더 나은 장기적인 공급측면 정책들에서 얻어지는 국민경제 후생의 잠재적 이익이 단기적인 총수요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민경제 후생의 잠재적 이익 보다 훨씬 더 크다(Lucas,2003).

Mukoyama & Sahin(2005)는 불완전시장에서 경기변동이 제거될 때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받는 후생을 비교하기 위해, 근로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로 구분하였다. 미숙련 근로자들은 경기변동 실업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고 스스로 보험을 들게 되는 기회는 더 적어진다. 결과적

으로 경기변동의 비용이 전형적인 숙련 노동자 보다 전형적인 미숙련 근로자에 훨씬 더 커질 것이다. 호경기에서 경기변동이 제거되게 되면, 미숙련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장기균형 소비(steady-state consumption)의 0.043%의 후생을 얻게 되고, 숙련근로자는 단지 0.005%의 후생을 얻게 된다. 불경기에 경기변동이 제거되게 되면, 미숙련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0.119%의 후생을 얻게 되고, 숙련 근로자는 평균적으로 0.043%의 후생을 얻게 된다. 불경기에서 경기변동이 제거되면, 유동성 제약에 있는 미숙련이면서 실업 상태인 근로자는 0.622%나 많은 후생을 얻게 되며, 이는 모든 근로자를 동일하게 가정할 때 얻어지는 후생 보다 약 80배나 더 큰 수치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안정화 정책의 비용이 적게 든다면 미숙련 근로자의 대다수는 안정화 정책을 선호하게 되지만, 그로 인한 부담이 다른 집단에 할당된다면 많은 숙련 근로자들은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3. 거대한 경제충격과 경제회복

1) 거대한 경제충격과 회복 패턴

2007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다른 나라의 금융위기 역사에서 나타난 패턴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Reinhart and Rogoff, 2008a). 그러나 어떤 금융위기가 단기나 중기에 회복될 수 있는 금융위기나 은행위기로 끝나고 장기 불황의 대공황으로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이나 실증분석 자료의 축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공황을 언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경제학은 미국 대공황 시점 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어, 경제학자들과 정부는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의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이론이 없다(Chari et al, 2003; Cole and Ohanian, 1999; Prescott, 1999). 그러나 <표 1>은 미국 대공황에서 어떤 변수의 회복이 빠르고 느린가에 대한 흥미로운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정책변수인 정부지출, 본원통화, M1은 빠른 시간 내에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만, 시장경제의 유인에 의해 변화하는 실물경제지표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권리만 있고 책임이 따르지 않는 정책변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정책 변수인 정부지출과 본원통화가 실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강하게 연계되어 경제 회복을 빠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 정책 당국은 큰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훨씬 더 정치하고 과급메커니즘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시장에 맡겨서 실물경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없다.

미국 대공황 분석에 적용된 경제성장 일반균형 접근에 의한 다양한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한 나라가 대공황으로 빠져들거나 대공황에서 회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가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1990년대(1989 - 1994)의 기간 동안 핀란드가 겪은 불황과 그것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다른 나라 경제가 대공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Conesa, et al, 2007). 핀란드 경제 회복과정의 경제지표를 보면, 실물경제 지표들이 미국 대공황과 달리 경제회복과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1〉 미국 대공황 장기불황의 경제지표

연도	실질 산출물	소비		투자	정부 구매	총고용	총근로 시간	노동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본원통화 (실질)	M1(실질)
		비내구재 및 서비스	내구 소비재								
192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930	87.3	90.8	76.2	69.2	105.1	93.2	91.9	95.9	94.8	98.8	97.3
1931	78	78	63.3	46.1	105.3	85.7	83.5	95.4	93.5	112	97.1
1932	65.1	65.1	75.8	22.2	97.2	77.5	73.4	90.7	87.8	133.1	65.1
1933	61.7	61.7	71.9	21.8	91.5	76.2	72.6	87.9	85.9	142.1	91.2
1934	64.4	64.4	71.9	27.9	100.8	79.9	71.7	96.7	92.6	144	93.8
1935	67.9	67.9	72.9	41.7	99.8	81.4	74.7	98.4	96.6	164.1	107.3
1936	74.7	74.7	76.7	52.6	113.5	83.9	80.6	101.6	99.9	184.4	119.8
1937	75.7	75.7	76.9	59.5	105.8	86.4	83	100.7	100.5	188.6	115.2
1938	70.2	70.2	73.9	38.6	111.5	80.4	76.3	102.4	100.3	208.1	117.2
1939	73.2	73.2	74.6	49	112.3	82.1	78.7	104.6	103.1	248.7	131.2

자료: Cole and Ohanian(1999).

위와 같은 대공황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지표와 이를 경제이론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공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대공황의 이슈가 무엇인가를 좀 더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간다(Kehoe and Prescott, 2002, 2007). 1930년대의 10년 동안의 긴 불황에 초점을 두어 대공황을 분석하게 되면, 불황의 정의도 달라진다. 대공황의 정의가 과거에는 “1929년과 1933년 사이에 산출물 및 고용이 왜 큰 폭으로 감소했는가?”였다면, 시간의 지평을 달리하게 되면 “미국 경제는 1930년대 10년 동안 왜 심한 불황에 처해 있었는가?”로 바뀔 수 있다(Prescott, 1999).

Rheinhart & Rogoff(2008a, b)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과거 위기 패턴과 다를 것이라는 가설, 즉 “This time is different”를 분석하기 위해 금융위기의 역사적 자료를 이용한 국제적 비교 분석하였다. 금융변수 및 실질 산출물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세계경제의 기축 통화국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로 전염되는 첫 경험이라 할 수 있다.²⁾ 전세계가 장기적으로 불경기일

2) 20세기에 대공황이 유일한 사건이라면,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전세계 파급

때, 불황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는 어느 나라 경제나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다.

대공황에서 본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환위기 및 은행위기에서 겪어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금융위기는 큰 충격을 주는 심각한 불황을 동반하게 된다. 많은 금융위기가 심각한 불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어 있지만, 이러한 충격에서 회복 패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없다. Cerra & Saxena(2008)³⁾은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황으로 산출물 손실이 만회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하여 Cole & Ohanian(1999)와 유사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 준다. 금융위기 및 정치적 위기에 연관된 거대한 산출물 손실은 지속적이며, 충격반응함수에 의하면 최악의 산출물 손실이 1% 이하이면 어떤 위기 이후에도 10년 이내에 회복이 가능하다. 표본 중에서도 거대한 부정적인 충격으로 산출물 손실이 부분적으로 만회되는 것은 내전의 경우에서만 발견된다. 지속적인 산출물 손실의 크기는 여러 가지 충격으로 인해 4% - 6%에 이르고 있다.

산출물의 손실이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된다면, 산출물의 생산요소에서도 충격은 지속된다. 거대한 부정적 위기가 닥치게 되면 산출물 손실은 지속되고, 그로 인해 그 이전 보다 고용 수준이 감소하고 투자 수준도 감소한다⁴⁾.

여러 가지 거대한 부정적 충격 이후 지속적인 산출물 손실을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일시적 산출물 손실은 변동적인 생산 가동율이나 경기변동의 기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산출물 손실을 설명하는 것은 경제학자들에게 또 하나의 퍼즐이다. 즉, 경제위기로 인한 부정적 충격으로 산출물이 손실되어 고용 수준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찾기 위해, 미시적 및 거시적 분석이 필요하다. Cerra & Saxena(2008)는 특히 저소득 국가 및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지속적인 파급메커니즘이 반영되는 이론모형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대공황을 겪었던 국가들에서 하나의 공통점은 금융관련 지표들의 회복은 빠르지만, 모든 경제변수에서 10년 이내에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물시장보다 금융시장의 조정과정이 빠르다는 것은 이제 거시경제 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이를테면,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해 왔고 1인당 GDP가 상승했지만 경제성장을, 그리고 투자, 소비, 고용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외환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용에서 나타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의 해결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였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위기의 불황 충격으로 인

은 21세기 유일한 사건이 될 수 있다.

3) 190개국의 자료에서 금융위기 및 정치위기 이후 산출물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금융위기는 외환위기, 은행위기 그리고 쌍둥이 금융위기를 지칭하며, 정치위기는 내전, 정치 지배구조 질(즉, 제도적 질)의 하락을 말한다.

4) Cerra & Saxena(2008)에 따르면, 금융위기는 성장 낙관론과 연관되어 있어, 경제성장의 예측치는 실제 경제 성장 결과 보다 더 높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증거는 위기로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나서 경제성장 반전의 낙관론으로 전환되게 하는 '제3의 요인'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고용이나 투자 부문에서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경제 논리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신제도학과와

해, 실물경제 지표에서 고용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기 경제하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금융부문이 아니라 실물부문의 경제지표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랬듯이 금융지표 상의 호전을 위기극복의 성과로 선전하기 시작하면, 금융부문의 전문가들이 시장과 정부에서 힘을 얻게 된다. 그로 인해, 실물부문의 회복은 대통령이나 국회의 국정 운영에서 자연스럽게 우선 순위가 밀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표를 극대화하고,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려면, 성과가 있는 경제지표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거가 다가올 수록, 이러한 유혹은 더 강해진다. 그로 인해, 금융경제지표에는 선순환이 이어가고 실물경제에서 악순환이 반복되어, 경제의 불균형이나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경제가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에 처한 경제상황이라 할 수 있다.

단기에 성과가 좋은 금융시장의 성장만으로 한 나라 경제의 경제안정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면, 실물시장 지표는 무시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구조와 잠재적 능력을 보면, 금융과 서비스가 대외경쟁력을 가지고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어쩌면 상당 기간 동안 불가능할 것이다.

2) 경제회복의 충격과 회복 경로의 이론적 논의

대공황 이후 거시경제학이 불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지식은 <그림 2>과 <그림 3>이다. 총수요관리 정책에서는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에 의한 수요 증대는 <그림 3>에서 ‘회복 경로 1’을 가정한다고 할 수 있다. 불황의 공급곡선은 무한대 탄력성을 갖기 때문에, 경제의 균형 생산수준은 총수요가 결정한다. 즉, 총수요가 늘면 고용이 증가하고, 산출물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의 조정경로를 보면, <그림 2>의 ‘회복 경로 1’이 작용하지만, <그림 3>의 ‘회복 경로 1’은 작용하지 않는다. <그림 2>에서는 총수요 관리가 강조되는 케인지안 정책에서는 공급측면의 경제의 회복경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림 3>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증대하려면 노동수요의 증가해야 하고, 노동 수요자는 기업이다. 학부 수준의 경제학의 기초지식으로서 기업의 노동수요 증대는 (4) 식과 같이 노동생산성, 투자, 경영혁신(상생경영, 품질혁신, 기업생태계 구축 등) 등이 증가할 때 이루어진다.

$$N_D = N(w, \text{투자}, \text{노동생산성}, \text{기타}) \quad (4)$$

여기서 w 는 임금이다.

학자들과 정책당국은 (4) 식이 노동수요를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경제회복 경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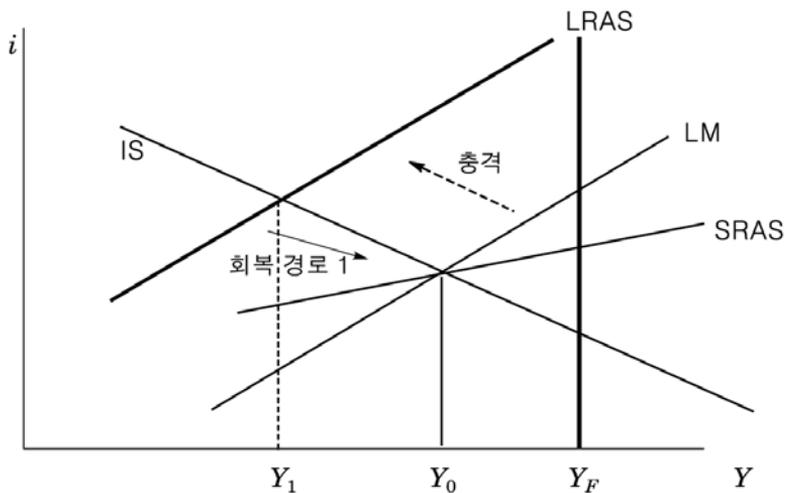
같이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신제도학과 논의는 이종욱(2010), North & Thomas(1972), North(1991) 등 참조.

희망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직접 실현시킬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은 없고 ‘국가 경제의 희망’이 잘 실현될 수 있는 환경만 구축해 줄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은 (4) 식도 알고 있고 <그림 2>에서 어떤 회복 경로를 선택해야 지속적 성장으로 수명이 영속될 수 있는가를 고려하게 된다. 시장에서 기업들에 의해 회복경로가 선택된다. 경제회복 경로에 정책당국과 기업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업의 선택에 의존하는 경제회복이 어떤 경로를 취하느냐에 따라, 성장과 고용이 병행될 수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먼저 경제회복의 패턴을 결정하는 한국 기업의 국내 투자와 해외 투자,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역할을 보자. 범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시장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과 제품 공급의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어느 나라에서 생산할지 최적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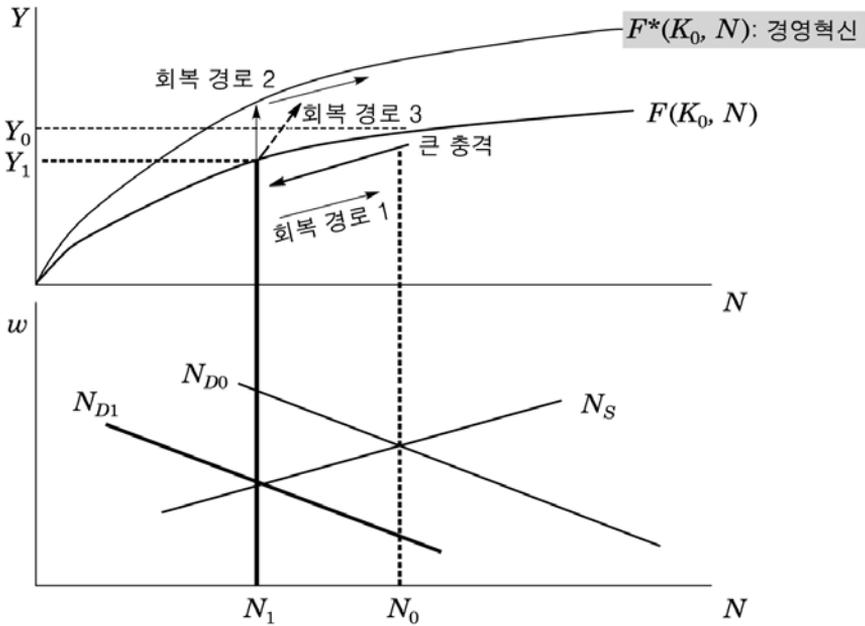
<그림 2>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해외에서 매출의 80 - 90%를 달성하고 있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범세계적 경쟁을 위한 투자 입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시설의 구축 또는 확대를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투자 없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게 되다. 범세계적인 제품 공급기지의 최적 포트폴리오를 이루기 위한 이러한 해외 직업투자가 이루어지면, 투자로 인한 기업의 매출 증대만큼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의 부가가치 증대로 인한 경제 성장만큼 고용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6) 호텔링이 1929년에 제시한 ‘호텔링의 입지경쟁 모델’(Hotelling's spatial competition model)이 적용되며, 이 이론은 기업의 입지선정, 브랜드, 품질, 제품 차별화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그림 3> 경제 불황과 공급측면의 경제회복 경로



반면 세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들도 세계 시장의 시각에서 제품 생산의 최적 입지를 결정하게 되므로⁷⁾,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소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유치가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 기업들도 거래비용을 최소화 해 주는 제도⁸⁾를 제공하는 국가를 선택하게 되며, 이런 선택이 이루어지면 성장과 함께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이종욱·전승철(2007)에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산업집중도가 중요하다.⁹⁾ 산업집중도가 높고 해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세계 시장을 상대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므로,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수요처를 얻기 위해 한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게 된다.

두 번째, 고용이 창출되는데 노동생산성을 보자. 노동생산성이 고용을 창출하게 되는 대표적인 메커니즘은 두 가지이다.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더 많은 생산을 해야 하므로 더 많은 직원들을 채용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증가하여

7) Helpman, Melitz, Yeaple(2003)에서 미국 기업들의 해외직접 투자 패턴을 보면, 첨단기술을 가진 제품들은 국내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해외에서 기술 유출이 일어나더라도 거래비용에서 더 유리한 중간기술 제품들은 해외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축약된 논문은 AER, (2004), 300-317 게재).

8) 약속만 하고 이 약속을 실행할 공식적 제도를 갖추지 않으면, 기업은 신뢰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좋은 조건의 약속도 외국 기업이나 국내기업을 유치하는데 효과가 없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했다가 다른 국가로 투자를 전환한 사례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약속 실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틀이 미흡했거나 다른 나라가 한국 보다 더 낮은 거래비용을 제공했다.

9) 진사공단, 파주, 방정 등의 사례를 국가 전체의 자료로 확대해, 흥미로운 실증분석 결과를 얻었다.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기존 생산시설로 수요에 필요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생산시설을 증가시키거나 더 효율적인 설비로 전환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 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뿐만 아니라 설비를 제공하는 기업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근로자의 일자리 지속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기업가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의 생산성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은 산업 현장의 노사간 갈등 보다 화합 속에서 향상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일자리 창출의 결정요인으로서 노동생산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산업 현장은 조화 보다 갈등의 상징이 되었다. 소위 민주화 투쟁¹⁰⁾으로 상징되는 1960년대를 겪으면서, 민주화 지식은 단 하나의 체계로 독선화 되어, 민주화가 생산성 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민주화 지식의 차별화나 다양성이 발전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기업경영의 민주화 사이에 개념의 구별이 없었다.

4. 경제위기 전개와 인지 시차

경제위기는 개방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Rey & Martin(2005)는 범세계화와 신흥시장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표 4>의 흥미로운 자료에서 시작하게 된다.

선진국에서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된 나라에서 위기의 빈도는 0.14이지만, 신흥시장에서 금융개방과 무역개방 된 나라에서 위기의 빈도는 0.57로서, 신흥시장 국가는 선진국 보다 약 4배 이상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이 금융 및 무역이 개방된 선진국이 되더라도, 대외부문에 서 경제위기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표 2> 위기의 빈도: 금융 및 무역 개방

	선진국		신흥시장	
	무역 폐쇄	무역 개방	무역 폐쇄	무역 개방
금융 폐쇄	0.07	0.1	0.35	0.15
금융 개방	0.05	0.14	0.76	0.57

더구나 한국의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의 경제위기는 정권 말 레임덕 기간에 발생

10)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보면, 민주화를 외치고 거리로 나섰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의 지원 부대로 역할을 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민주화 투쟁은 민주화 리더들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 투쟁의 리더들이 대통령이 되어 국가를 운영했지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와 같은 고용창출이 없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현재 및 미래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고용창출이 되었다.

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치 및 관료 중립적으로 대외적 충격을 감시하고 경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범세계화 위험과 도덕적 해이의 위험은 우리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언제 시작되고, 미국 정책당국이 제대로 대응을 하게 되었는가를 보면, 어떤 사건이 경제위기인지 아는 것도 힘들지만, 원인에 걸 맞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도 힘들다. 미국 연준 의장인 Bernanke(2010)는 2007년 8월에 시작된 금융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로 보고 있다. 2007년 8월에 BNP Paribas의 펀드 환매 중단이 금융위기의 발단인 셈이다.

BNP Paribas 펀드 환매 중단 이후 자금시장 경색은 심화되어 가지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조절방식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2007년 12월 들어, 금융기관들이 서브 프라이머 손실을 계속 발표하자, 연방은행은 전통적 유동성 공급 채널 이외에 TAF(Term Auction Facilities), TALF(term asset-backed loan Facilities)¹¹⁾ 등을 도입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유동성 공급 채널이 도입되지만, 2008년 3월에는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베어스텐스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연방준비은행이 즉각 개입하여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인수된다. 금융안전망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비은행권에도 자연스럽게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살아나온 미국의 3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리만 브라더스가 유동성 부족의 충격을 받자, 베어스텐스 정리와 달리 2008년 9월 14일 리만 브라더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리만 브라더스 파산 절차는 연방준비은행 역할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는 재정정책을 통한 공적 자금 투입이 필요하게 되어 미국 정부가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자금시장은 더 경색되고, 연방준비은행의 통화공급 방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을 수 없게 된다.

베어스텐스와 리만 브라더스는 repo 등 담보 차입과 reverse repo 등 담보 대출 비중이 높아, 두 회사의 '담보차입/총부채' 비중은 각각 34%, 37%이고, '담보대출/총자산' 비중은 각각 32%, 44%이다. 서브 프라이머 모기지의 부실로 인해, 투자회사의 대규모 손실과 유동성 부족은 곧 은행의 부실로 직결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위기 전개 과정을 보면, 막강한 정보력을 가진 FRB도 금융위기 인지가 늦었다.¹²⁾ 즉, 서브프라이머 모기지 사태가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될지 예측을 못했다. 그로 인해 재정정책의 인지도도 더 늦다. 통화정책으로 금융위기 극복이 불가능해지면서, 금융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정정책의 개입을 위한 재원은 2009년 2월 미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마련된다(Blanchard, et al, 2010).

11) 소비자 및 중소기업 대출의 유가증권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금융상품이다.

12) 골드만 삭스 기소의 발단이 된 CDO 공동개발을 추진한 헤지펀드 폴슨앤코(Paulson & Co)는 FRB, 미국 정부와 달리 2008년 주택 가격 폭락을 예측하여 명성과 막대한 부를 얻었다(매일경제, 2010.4.19).

2008년 2월에 시작된 MB 정부는 미국에서 심각하게 진행되는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유동성 위기 충격에서도 안전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수출 촉진을 위한 환율 방어에 급급하여,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였다.

한국 정부가 미국발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3월 이후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유동성 위기의 심각성을 누구 보다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외부 충격을 진지하게 분석하지 않고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닥친 위기가 아니라 충격이 적다는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한 한 기업인의 답답한 심정은 다음과 같은 인터뷰에서 알 수 있다.

1997, 98년 위환위기 때는 위기의 실체에 비해 국민의 위기의식이 너무 컸던 반면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보다 더 심각한데도 국민의 체감위기의식은 오히려 덜한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 지금은 세계적인 총체적 수요 감소로 수출판로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세계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낙후된 금융부문을 이번 기회에 선진화 하고,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

국민의 힘을 결집해 한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멀지만 가장 확실한 위기 극복의 길'이다.

(동아일보, 2009/3/5)

5. MB 정부와 금융위기 극복

MB 정부 출범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전세계적인 전파 시점이었지만 전염인자가 늦어, MB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747과 외부 경제 환경 사이에 상충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위기 극복이라는 대세를 따르면서,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큰 충격으로 과급되지 않을 수 있었고, 경제의 위기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제사에서 큰 경제위기 충격이 오면 경제 회복과 함께 경제 구조 변화가 발생하여, 그 이전 경제구조와 다른 경제성과 지표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차이점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경제위기 이전의 성과 지표로 경제위기 이후 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1997년 외환위기와 10년 후인 2008년 금융위기 사이에는 경제회복의 성과 패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히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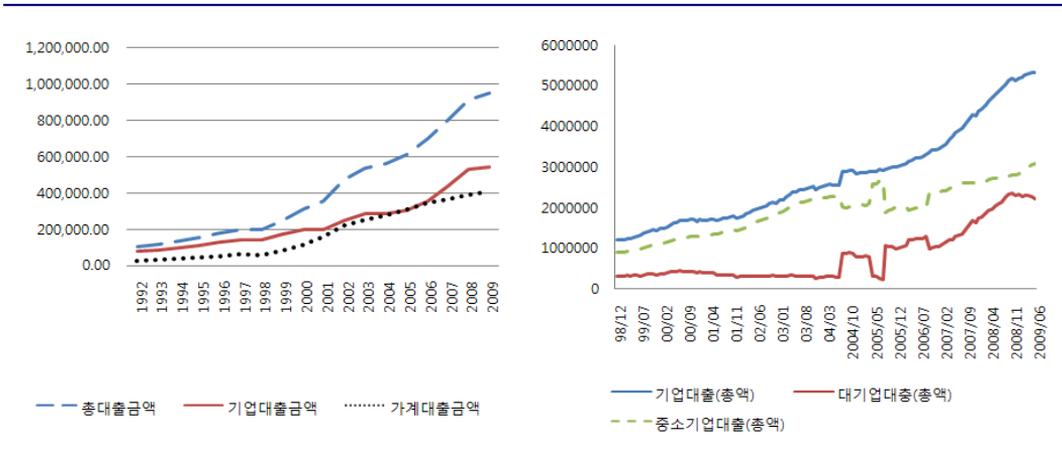
1)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금융기관의 대출은 금융기관 수익의 원천이므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크게 감

소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은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신규 대출을 축소할 것이고¹³⁾, 기존 대출을 축소하기가 어렵다. 위기 발생한 이후에 신용등급인 낮은 기업에게 대출 상환을 독촉할 수 없고 위험프리미엄 증대로 대출 이자율을 더 인상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MB 정부가 시작된 이후,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금융위기로 대출의 증가속도가 둔화되지만 대출이 감소하지 않는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정부는 금융기관과의 협상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 금융기관인 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적극적인 대출연장 및 신규대출을 추진하였다. 은행의 유동성 부족이나 위험회피로 인해 보증을 받아도 대출을 해 주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림 4> 금융기관의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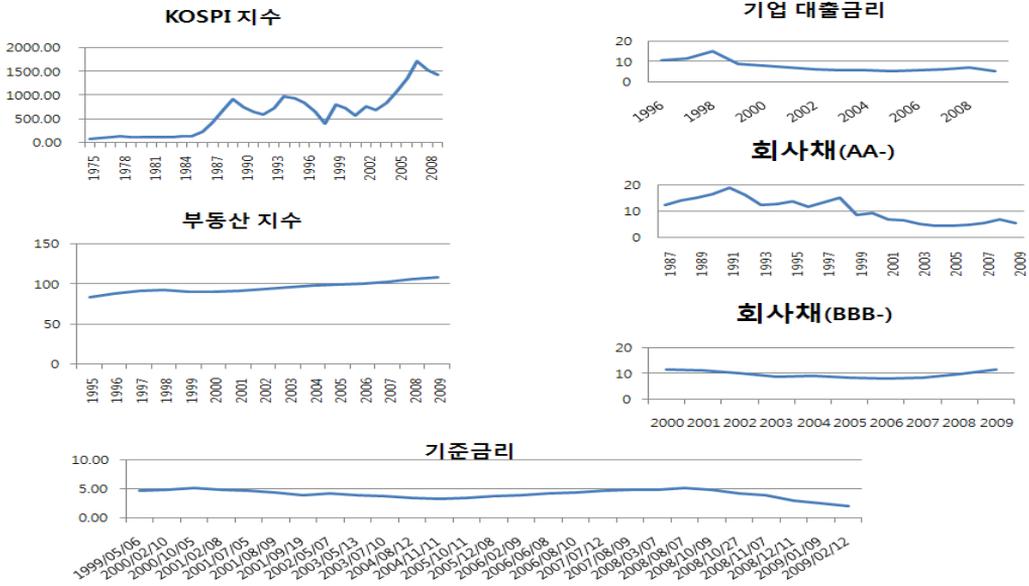


<그림 5>의 금융시장을 보면 어떤 경제변수들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주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었고, 기업대출금리, 회사채 (BBB-) 등급의 채권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 폭락도 없었다. 단지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인 기준금리가 위기 이전 수준 보다 더 낮아, 한국경제에서도 끊임없이 출구전략이 언급되고 있다.¹⁴⁾

13) 금융기관 경영이 우수하다면, 경기가 좋을 때 미래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대출을 회수해야 한다.

14) 기업 대출금리가 이미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대출 및 가계대출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연계될지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앞에서 논의된 거시건전성 정책의 수단이 금융감독정책과 결합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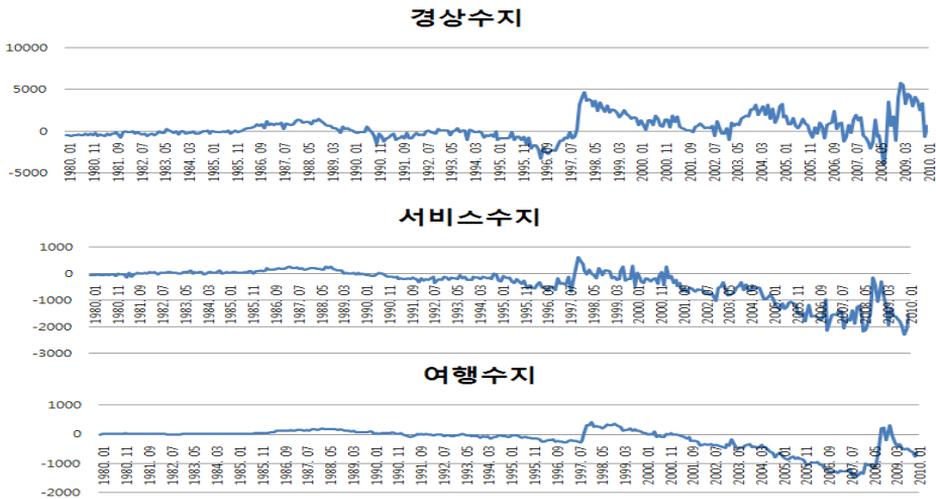
〈그림 5〉 금융시장



2) 대외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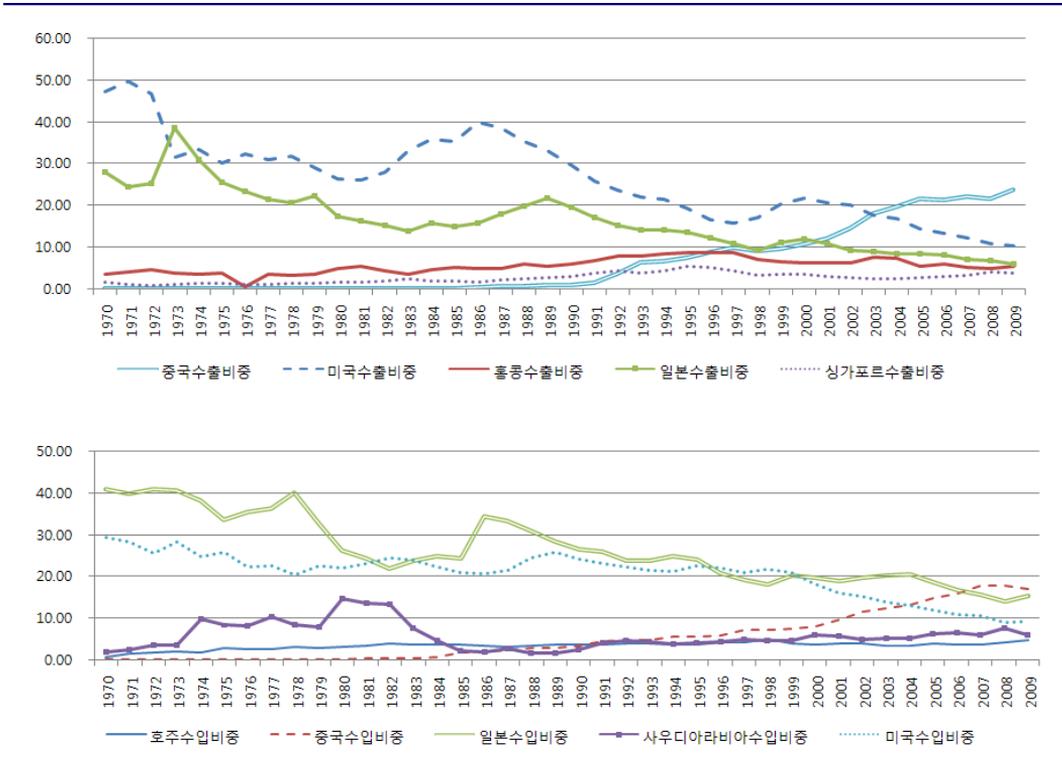
동남아시아 전염효과와 국내 취약 요인이 결합된 외환위기와 달리, 국제금융센터에서 발생된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부문의 회복 패턴이 외환위기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그림 6〉 경상수지, 서비스수지 및 여행수지



<그림 6>에서 외환위기 때 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커지지만, 서비스 수지는 큰 폭의 적자, 여행수지는 짧은 기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고 있다. 그리고 <그림 7>의 국가별 수출에서는 중국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나머지 그 동안 수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신흥시장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수입에서는 중국 수입비중이 높고 미국에서 수입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2009년에 들어 일본 수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원료를 수입하는 호주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7> 국가별 수출 및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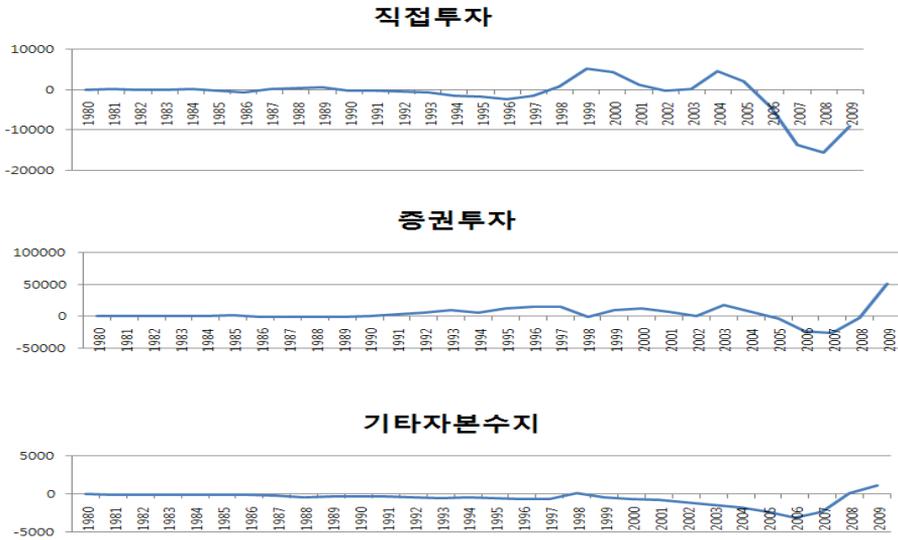
자본수지에서는 직접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MB 정부의 시작과 함께 그 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다. 증권투자 및 기타 자본수지는 금융위기 동안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림 9>를 보면, 외환위기가 발생된 1997년 그리고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2008년의 순대외채권의 패턴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⁵⁾ 기축 통화국이 아니면서 기축통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15)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의 조사월보 통계지표에서 가장 큰 변화가 기타 자본수지를 분리하여 경제주체별 순대외채권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외부문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는 대외무역에 경제성장을 크게 의존하고 있어, 순대외채권 규모의 추이는 한국경제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경제지표이다. 대통령, 국회 등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외환 위기, 금융위기 등의 재난을 피해갈 수 있다. 2005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6년 이후 급감하게 된 순대외채권이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이 추이가 얼마나 지속되도록 할지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관심과 능력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회의 관심 및 능력에도 달려 있다.

〈그림 8〉 자본수지



〈그림 9〉 대외채권과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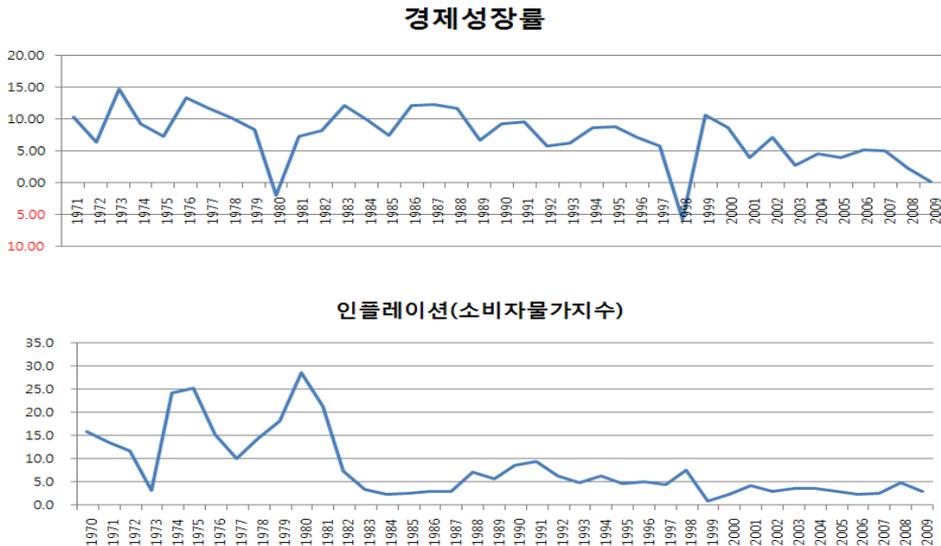
3) 실물부문

<그림 10>에서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달성되었지만 그 이후 성장률은 5% 대이고, 참여 정부 말기부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2009년도 경제성장의 성과를 제외하면,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직후 1998년의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와 같은 경제성장의 패턴을 보인다면, 한국의 지속성장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게 될 수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낮아, 물가 부담은 적다. 물가가 안정되어, 물가 부담 없이 경제성장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을 Blanchard, et al(2010)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과 비유하여 선진국 경제에서 국민소득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The Great Moderation”로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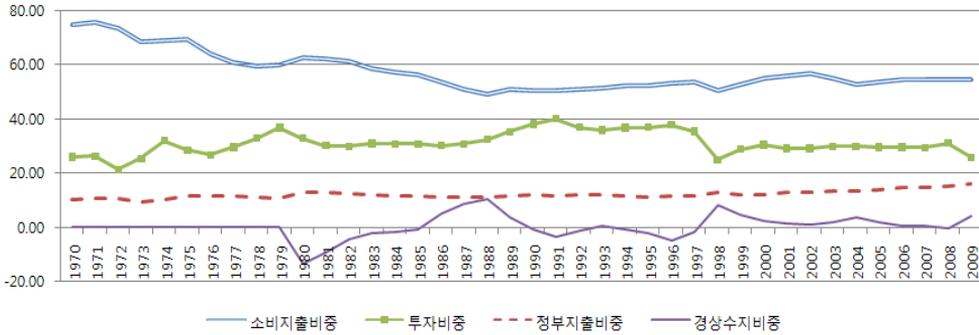
<그림 10>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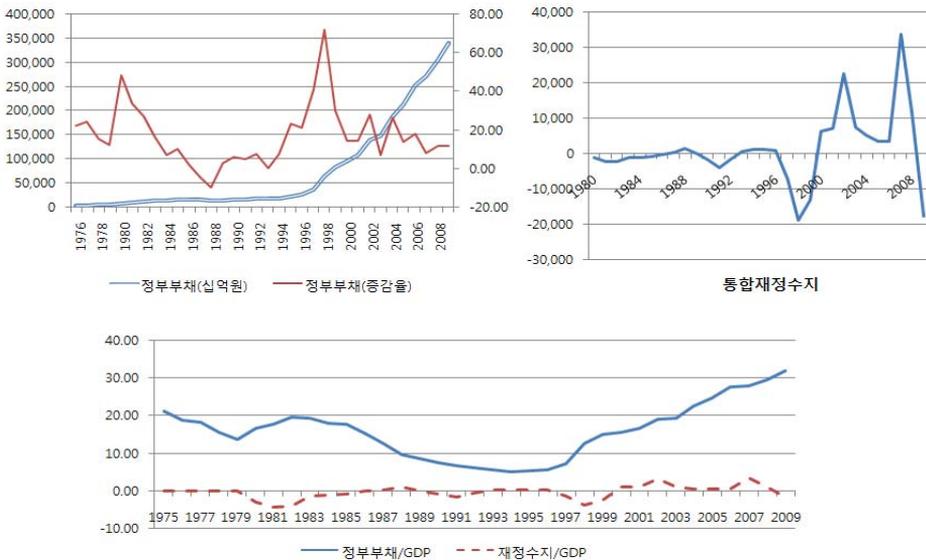
<그림 11>의 총수요 구성을 보면, 금융위기 이후 GNI에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의 구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1>에서 대공황 이후 경기회복 과정에서도 투자 회복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 이후에도 외환위기 보다 더 낮은 투자수준이 유지될지 우려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그림 2>에서 경기회복의 패턴을 결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여, 2009년 플러스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의 획기적인 증대라는 우려가 남아 있다.

<그림 11> 총수요 비중



<그림 12> 정부부채와 통합재정수지¹⁶⁾



<그림 12>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 부채 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 이후 2008년까지 흑자이지만,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재정적자 증대로, 정부 부채는 더 증가하게 된다. 2009년 재정적자 확대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32.03%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의 부채 300조원 정도를 포함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63%에 이르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그 비중은 위험 수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16)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12>에서 지난해 재정적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 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이 있었다. 이러한 재정여력이 있었기에,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거액의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도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

심각한 불경기나 경제위기, 즉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에서 겪었던 바와 같이 공적자금 투입이 있어야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이 희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은 무력하므로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재정정책뿐이다. 그러나 재정정책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¹⁷⁾ 경제의 위기 상황은 사전적 예측이 쉽지 않아, 위기 발생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림 12>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재정여력은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한 수준에 와 있다. 불경기 극복에서 재정정책이 선도적 역할로서 ‘재정 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

매년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본방정식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경제학의 기초지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재정 적자의 감당 능력은 (5) 식과 같은 간단한 방정식을 이용해 쉽게 평가할 수 있다.

$$\dot{b} = (a + i - g)b \tag{5}$$

위 식에서 $a = \frac{\text{본원적 재정적자}}{\text{정부부채}}$, $i = \text{정부 부채 이자율}$, $g = \text{경제성장율}$, $b = \frac{\text{정부부채}}{\text{국민소득}}$ 이다.

미래 한국 경제를 위해 MB 정부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는 한국경제의 감당능력을 고려하지 않고¹⁸⁾ 분배, 지방자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정책의 여력이 크게 감소되었다. 이는 한국경제 및 한국 국민이 감당할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복지 확대, 그리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무리하게 확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재정정책의 여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노동시장

<그림 13>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¹⁹⁾은 그 이전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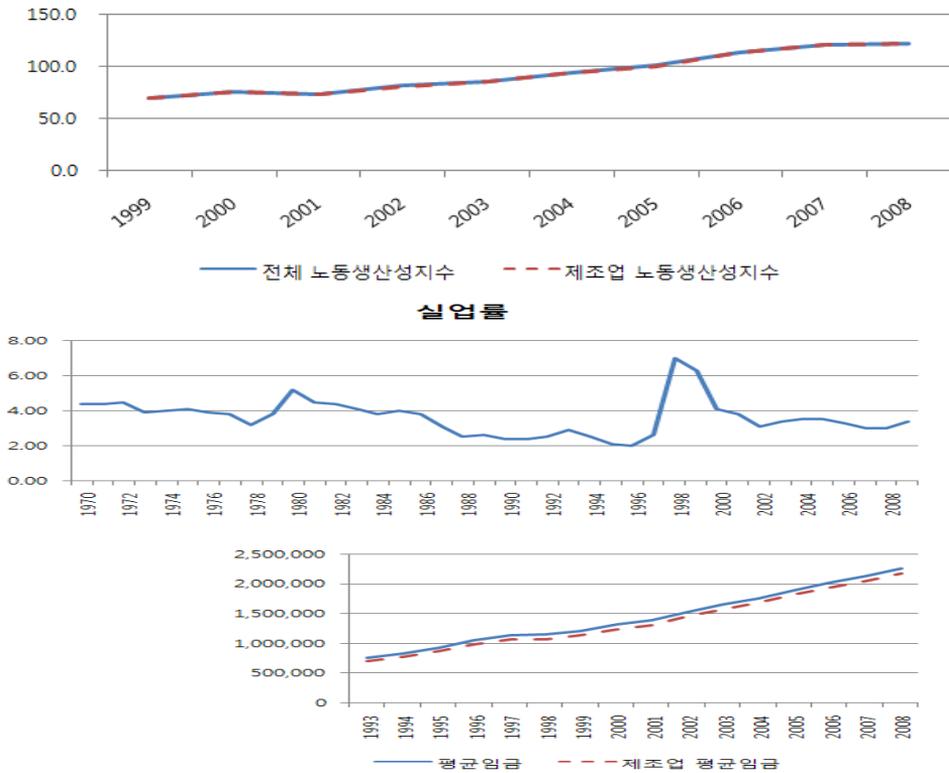
17)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역행적 재정정책은 심각한 경제 충격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Blanchard, et al, 2010).

18) 경제충격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미래 정부, 즉 미래 국민들 위한 배려가 미진하였다.

19) 한국의 실업률 통계에서는 ILO 기준의 고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자로 분류되어야 사람들(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족의 일을 무급으로 돕는 사람, 구직이 힘들어 진학

준의 실업률이 한국경제의 새로운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MB 정부 이후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상승된 실업률 수준 추이보다 더 높은 실업률 추이가 나타날지 우려하게 된다. <표 1>의 미국 대공황의 경험에 의하면, 실업률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그림 13> 실업률, 임금 및 노동생산성 추이



실업률이 상승하는데, 평균임금은 거의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상승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국면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은 2005년 이후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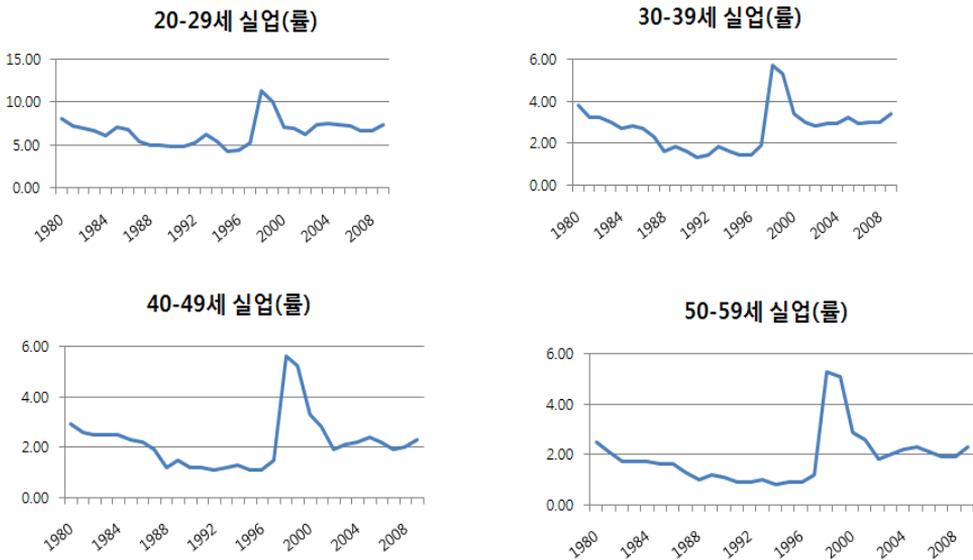
를 택한 사람, 결혼·출산·육아 때문에 경력이 없게 된 주부 등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업률 계산에서 빠지게 되어 실업률은 낮지만, 비경제활동 인구가 40.5%로 아주 높아,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업률의 통계가 부실해 효과적인 고용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고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실행하여 재정재원을 절약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기 위해, ILO의 실업자 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고용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실례로 미국과 같이 실업률을 6단계로 나누어 실업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다.

가 감소하고, 2007년 이후 하향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인사경제학(personnel economics)이론에 따르면(Lazear, 2000), 금전적 인센티브가 산출물 증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그림 13>에서 임금 상승과 노동생산성의 추이를 보면, 인사경제학이 제시하는 임금과 인센티브 시스템의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시간당 임금 보다 성과급이 가미 되는 임금 시스템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균임금의 상승 속도 및 노동생산성이 <그림 2>에서 경제회복의 경로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전체 실업률을 <그림 14>와 같이 연령별 실업률 추이로 전환해 보면, MB 정부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 상승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MB 정부의 모든 정책의 성과가 왜 고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에 쉽게 공감할 수 있다.

<그림 14> 연령별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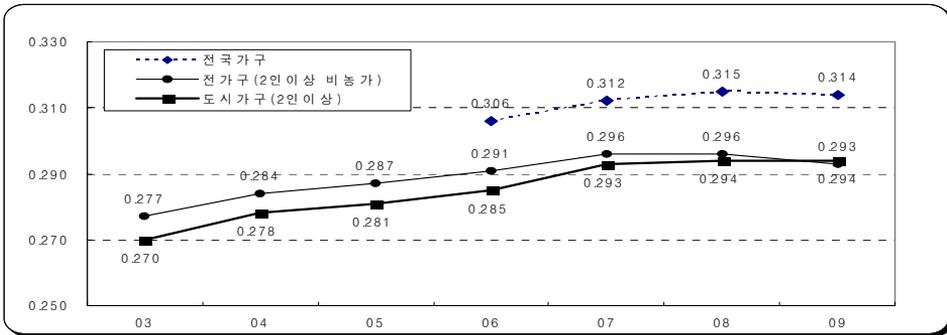
5) 소득분포와 지니계수

<그림 15>에서 외환위기 이후 지니계수가 증가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그리고 상대적 빈곤율²⁰⁾이 증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가 악화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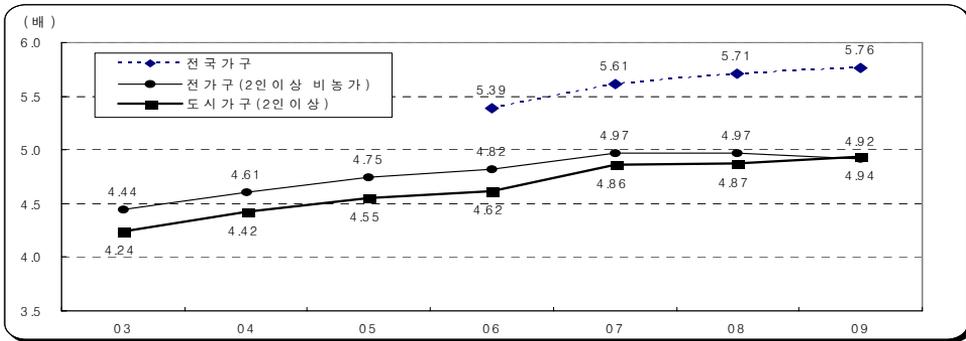
20)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그림 15〉 가계동향 조사로 본 소득분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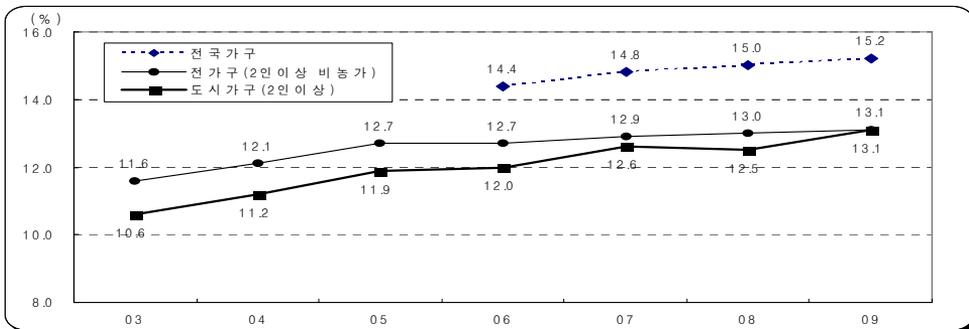
(a) 전국가구 대상 5분위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b) 소득 5분위 배율 기준(가처분소득)



(b) 상대적 빈곤율 추이(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0. 2월 25일.

MB정부 이후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가 2008년 0.315에서 2009년 0.314로 약간 하락하여, 소득분포가 약간 개선되고 있다. 이와 달리, 소득 5분위 배율은 2008년 5.71에서 2009년 5.76으로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2008년 15.0에서 2009년 15.2로 증가하고 있다.

<표 1>의 미국 대공황에서 회복 되는 경제변수의 변화 그리고 외환위기와 같은 큰 충격으로 인해 경제구조가 변화하므로,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큰 충격으로 한국의 지니계수가 개선될지 악화되어 갈지 주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소득분배는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구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어야 개선될 수 있다. 근로자의 소득은 일자리에서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수요 하는 기업이 있어야 한다.

소득 분배 개선의 최선의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그 일자리에 맞는 숙련 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강조해 온 세금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는 그 수혜자의 대상을 한정했을 때 효과가 있다. 노약자, 학생, 15세 미만 어린이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돌보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소득분배는 그 나라 국민들의 건전한 생활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와 경제성장의 관계가 양인지 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일관된 실증분석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손 종철, 2010). 각 국가의 상황 및 시기에 따라 다르다.

6. MB 정부의 성과와 과제

위기 극복은 대공황과 같이 전개되는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한국경제의 태생적인 위협으로서 Calvo, et al(2008)가 강조하는 급정지(Sudden Stop, 2S) 또는 시스템 급정지(Systemic Sudden Stops, 3S)²¹⁾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총수요관리 대책, 총공급관리 및 제도개혁에 중점을 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²²⁾.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 고용의 89.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및 수출 증대의 역할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부품 및 소재 국산화 위한 정부 지출 증대와 연구인력 집중 투자, 급정지 방지에 중점을 둔 금융의 제도적 개편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생태계 구축과 공유지식의 확대,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의사결정 체계 변화, 통화 및 재정정책과 같은 차원의 금융 감독 정책 위상제고, 관료의 승진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MB 정부의 성과와 과제는 Landes(1998)가 영국이 강대국이 되는 이유를 간략히 기억해 보면서 전개하려고 한다.²³⁾

영국이 강대국이 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통치자가 있는 왕국, 하나로 통일된 국가나 정치체제가 아니라 동일한 정체성과 충성심 그리고 시민의 평등권으로 특징지을 수

21)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문헌은 이종욱(2009) 참조.

22) 이에 대한 논의는 이종욱(2009, 2010)을 보완한 것임.

23) 미국이 강대국이 되는 경제성장의 원천은 North(1990) 참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이종욱(2010).

있는 자의식(self-consciousness), 知己(self-awareness)를 의미한다. 국가는 사회적 목적(social purpose)과 개인의 영감 및 솔선수범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들의 '집단적 시너지(collective synergy)' 효과를 통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한 나라의 시민들은 국가의 격려와 솔선수범에 더 잘 호응하게 되며, 역으로 국가는 능동적인 사회적 추진력과 일치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Landes, p.219).

1) MB 정부 성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였다. MB 정부는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전연 효과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여, 금융시장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다.

금융위기 회복의 공통점은 금융시장의 회복이 빠르고, 실물시장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다. 금융시장의 회복을 두고 MB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게 되면, 국민의 정부와 같은 실책²⁴⁾을 범할 수 있다. Coval, et al(2009)가 기술하는 경제재난채권(economic catastrophe bond)에서 채권의 가치²⁵⁾는 경제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의 분포 및 경제상태의 가격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따라서 MB 정부는 금융시장의 주가 회복에 고무되지 말고, 왜 금융시장 회복 만큼 빨리 실물시장 및 노동시장이 회복되지 않는가를 고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⁶⁾

경제상황은 금융시장의 회복만으로 정상적인 경제 상황으로 복귀되지 않는다. <그림 1>에서 금융시장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더라도 실물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다. 금융시장의 회복을 MB 정부의 성과로 홍보하는 것을 절제하고, 집필자에 따라 MB 정부 성과로 나열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앞 절의 논의를 배경으로 필자의 관점에서 실물시장과 연계되어 성과를 얻은 것만 소개해 본다.²⁷⁾

24) 해방 이후 6.25 전쟁을 제외하면 가장 큰 국난이라고 하였지만, 금융시장의 회복을 두고 외환위기 극복했다고 국민의 정부 치적을 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국민의 정부는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 정보를 독점하여 구조조정의 치적에 중점을 두어, 많은 실수를 했다. 그러나 언론과 홍보를 잘 활용하여, 외화를 구하기 위한 국내자산의 방매를 훌륭한 구조조정으로 칭송하여, 한국의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에 지난 10년 동안 이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다.

25) 자산가격결정에서 유가증권의 가치 결정을 어떻게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Arrow-Debreu의 우발사건(contingent claims)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건변수인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채권의 가격도 붕괴될 수 밖에 없다.

26)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화정책 못지않게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7) 필자의 능력,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 시간 제약 등으로 인해, 경제의 다양한 국면에서 MB 성과를 찾아 내어 논문에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훗날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임기 동안 구체적 자료를 이용하여 MB 정부의 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첫째,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서 교섭력이 취약한 계층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 외환위기 때와 달리 기업 및 가계 대출이 갑자기 신규 대출이 축소되거나 대출회수 요구가 적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도 호경기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축적할 수 있었다.

둘째, MB 정부 출범 이후 직접투자의 적자 폭이 감소되어, 외국 기업의 유치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선진국의 금융위기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 감소하였지만, 신흥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수출 증대를 통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된 한국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넷째, <그림 13>에서 임금상승 추이와 상응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 증대가 필요 한데,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사관계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림 2>와 식 (3)의 이론대로 노동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역할이 바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MB 정부는 투쟁적 노조에 합법적 대응하였다. 산업현장에서 갈등 보다 화합이 노사간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 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간다면, 일자리도 더 창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순대외채권이 관리될 수 있는 통계지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기축통화를 많이 사용하는 대외무역에 경제성장을 의존하는 국가의 위험관리가 더 체계화 될 수 있게 되었다. 대외채무관리 부실에서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그 동안 순대외채권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통계가 명시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명확한 통계지표로 관리되면서 2008년 이후 순대외채권 적자 규모가 감소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2) MB 정부의 과제²⁸⁾

(1) 고용창출

가. 산업별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한 성장, 고용, 및 인사경제학

한국에서는 개인의 소득(소비)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의 평균소득(소비) 수준은 생활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강성진, 2010). 소득을 창출하는 데는 개인이 일자리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재정지출도 고용창출 능력이 좋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²⁹⁾ 그러나 어떤 산업이 고용흡수 능력이 좋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육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28) 집필자의 지식의 폭 및 수준, 그리고 관심에 따라 MB 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필자의 관점에서 MB 정부의 향후 과제라 생각되는 것을 정리해 나갈 것이다.

29) 김 영생 외(200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에 대한 미시적 연구나 이를 분석할 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이 임금 차이를 수용하게 되면, 범용부품 산업에서도 기업의 수익성에 맞는 임금 제공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잘 이용한다면, 중국, 동남아시아 등 임금이 싼 국가에 가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생산 가능한 품목들이 얼마든지 있다.

한국 정부는 오래 동안 경제발전을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노-하우가 있었지만, 3-5%사이의 경제성장률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재정지출의 활용에 대해 고민하거나 성공을 해 본 경험이 없다. 정부도 현재 필요한 고용창출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집행 체계도 연구해야 한다.³⁰⁾

<표 3>에서 전산업에서 사업체 비중과 전체 종사자 수에서 각 산업의 종사자 수 비중을 비교해, 고용창출 능력이 좋은 산업으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을 들 수 있다. 재정지출도 이러한 산업에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되어야 한다.

<표 3> 2006년 기준 산업별 사업체수의 고용창출 능력

산업분류	사업체 수 (천개)	종사자 수(천명)
전산업	3022.1	12445.1
	100.0	100.0
제조업	339.1	3409.0
	11.2	27.4
건설업	860.3	834.9
	28.5	6.7
운수업	341.0	820.0
	11.3	6.6
도매 및 소매	860.3	2436.4
	28.5	19.6
숙박 및 음식	617.6	1653.3
	20.4	13.3
금융 및 보험업	9.1	138.5
	0.3	1.1
부동산 및 임대업	104.2	278.7
	3.4	2.2
사업서비스	86.3	1070.6
	2.9	8.6
교육서비스업	109.1	437.2
	3.6	3.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120.0	316.4
	4.0	2.5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73.0	597.0
	9.0	4.8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 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자료 활용).

있는 DB가 부족하여, 여기서는 거시적 접근으로 산업별 고용창출 능력을 분석한다.

30)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한 대표적인 최근 경험으로 Busch 대통령이 2002년 3월 9일에 서명한 'Job Creation and worker Assistance'법안을 들 수 있다(Auerbach, 2002).

금융산업의 취약성으로 볼 때 금융 및 보험업에서 고용 창출이 증가하기는 쉽지 않다.³¹⁾ 그러나 금융산업은 보수 수준이 높아 우수한 인력이 가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간 숙련 및 미숙련 인력의 취업을 확대시킬 수 없다.

제조업, 사업서비스업은 숙련노동, 중간숙련과 미숙련 노동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이지만, 숙련도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크다. 더구나 제조업, 사업서비스업에서는 숙련노동의 고용이 증가하면, 미숙련 노동의 고용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재 산업 경쟁력 수준에서 어떤 서비스 산업에서 어느 정도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없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자리를 찾는 인력의 능력과 임금이 맞는 다양한 계층의 직업에 대한 정보가 일자리를 찾는 인력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Lazear(2000)가 제시한 인사경제학의 원리에 맞게, 임금과 산출물 증대 사이에는 임금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임금 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한국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 이상이지만, 근로자의 경력과 임금 추이를 보면 중소기업 취업자가 겪게 되는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박재민·김선우(20110)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근로하는 일생동안 일자리를 옮기더라도 더 임금이 낮아지고 그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대기업에서 일을 시작한 근로자는 근로하는 일생동안 일자리를 옮기더라도 임금이 낮아지는 속도가 느리다. 이러한 임금 격차로 젊은이들이 노동을 기피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의 복지적 차원에서 배려가 필요하다. 근로자 자녀의 교육 강화를 위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주택 공급 및 환경 개선, 보건 등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은퇴 후 생활 등에서 기본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도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보완적 정책을 통해, 일생 동안 열심히 근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느낄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 나가야 한다. 이는 인기영합주의로 추진될 것이 아니고, 분석 연구하여 한국경제의 장기성장 경로에 부합되는 적절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MB 정부에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및 금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전문가를 대거 등용하지만,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금융, 실물, 인력 등의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없다. 금융시장, 실물시장에서 대기업, 중소기업의 차이를 인지하고,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어느 정부에서나 중소기업을 담당해 온 관료가 승진해, 힘 있는 정책 입안자가 되는 일이 없고, 이는 MB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가들을 자주 만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이를 통해 MB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용창출 전략은 만들

31)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조업의 보조자 또는 동반자로서 금융업과 서비스업이 한국경제에 더 경쟁력 있는 부문이다. 서비스 산업에 종사자가 많아, 서비스 산업이 고용 흡수 능력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서비스 산업에서는 임금 격차가 심하고 제조업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

어 내지 못하고 있다.

나. 정부 지원 연구개발 및 정책 자금 평가에서 고용지표 의무 도입

정부 부채를 늘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지만,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시 고용 및 임시 고용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다. 정부나 감사평가원이 예산 성과 평가를 위해 활용하려는 미국의 PART에서도 경제적 목표를 강조하는 성과부문만 제외되어 있다. 예산 당국의 정부 예산 편성 지침그리고 예산 지출의 성과 평가에서도 고용창출, 경제성장, 수출 등과 같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 지원 예산 실행에서 고용 창출 현황이 집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 없이,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고용창출에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종욱 외(2009)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으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해 보면, 중소기업 지원 자금에서 상시고용자 수가 증가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모든 정부 지원 기관들이 하지 않으니, 재정재원으로 지원에서 실패의 사례가 있기 이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그러한 고용창출 효과를 긍정적으로 나와도 그러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활용하지 않는다.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위험이 높은 창업/초기 기업의 지원에서 실패 사례는 정상적인 것이다. 모든 나라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있고, 한국과 달리 미국 중소기업 정책 지원에서의 실패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³²⁾

다. 경제 안정화 정부 개입 축소와 미숙련 근로자 축소

경기변동 제거의 후생효과 측정에 대한 연구 결과로 보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정책이 미숙련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부의 경기변동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 하려면, 한 나라 경제가 미숙련 근로자를 최소화 하는 정책을 수립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자료에서는 숙련근로자와 미숙련 취업률이 동행성을 보이고 있어(Mukoyama & Sahin, 2005), 숙련근로자의 취업이 늘면 미숙련 취업 기회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생산성을 높여 대량 생산 가능한 범용부품, 그리고 단순 서비스산업이다. 정부의 고용지원 정책도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지원 되어야 효과적일 수 있지만, 최근 고용지원 보조금 지원은 그러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이 우선인 상황에서 할 수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초교육, 직업훈련 등을 연계하여 체계적을 실행될 필요가 있다.

라. 상생경영의 확산과 투자 및 고용 확대

상생경영은 노사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정부는 단지 격려 하고 권장해야 하는 데, MB 정부에서

32) 미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핵심은 창업과 기업성장을 통한 고용창출 지원이다(홍순영 · 이종욱 · 송치승, 2007).

는 상생경영의 정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상생경영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되다 보니, 혼란스럽다. MB 정부에서 상생경영의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업간 협력을 중시하는 상생경영은 모든 거래에 경쟁을 중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와 서로 부합되기 어렵다. 인터뷰를 해 보면, 상생경영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담당자들도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 한다.

상생경영은 지경부 및 중소기업청의 주요 시책이 되어야 하고, 지경부 및 중소기업청의 사업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상생경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권한으로 강요해서 안 되고, 자율적 협력을 강조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투자,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지면, 이는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도 줄이고, 사업의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MB정부가 내세우는 중견기업 육성도 상생경영을 통한 협력 기업의 성장을 통해 가장 빨리 달성할 수 있다. 대기업의 협력 기업 중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적지 않지만, 중소기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분석하여, 인센티브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면, 중견기업도 쉽게 탄생할 수 없다. MB 정부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가진 대기업 협력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상생경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경부, 중소기업청가 빠지고,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경영을 주관해서는 대기업 협력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MB 정부에서는 노사의 상생경영 지식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상생경영의 비전이 서로 달라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사회적, 정치적 상생경영의 양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MB 정부가 주창하는 상생경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여, 상생경영의 지식체계를 보강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제도개선과 정부 부처 역할의 리더십 개선

가. 제도 개선과 관료 변화

거시경제 성과를 극대화 하려면, 경쟁력이 취약한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³³⁾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 및 중진국 국민일수록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일반 국민들은 보이지 않아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³⁴⁾. MB 정부는 대통령 임기 초기부터 추진해야 할 ‘보이지 않는 제도 개선’에서 미진하다.

MB 초기 정부에서는 눈에 보이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봇대’ 뽑기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규제는 법 보다 법을 실행하는 시행세칙, 규칙, 규정 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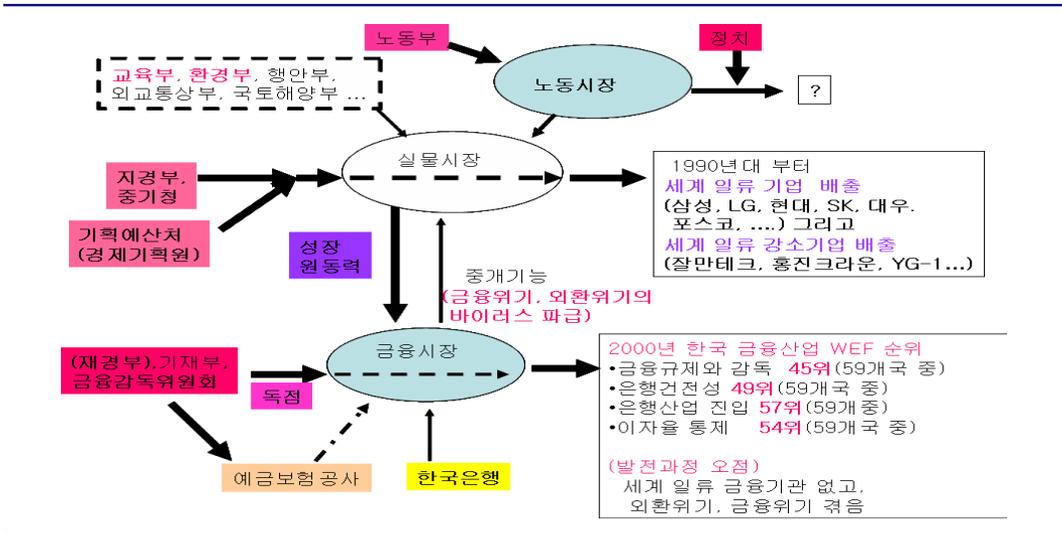
33)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나누어지며, 제도가 국가발전에 왜 중요하고, 제도의 고안 및 실행에서 관료의 사고체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구체적 논술에 대해서는 이종욱(2010) 참조.

34) 제도와 거시경제적 성과에 대한 대표적 연구의 최근까지의 중요한 참고문헌은 이종욱(2010) 참조.

즉, 관료들은 법을 실행하는 대리인이며, 이들의 사고방식에서 시행세칙, 규칙, 규정 등이 결정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이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규제는 관료들이 어떤 사고 체계를 갖는가에 달려 있지, 전봇대가 규제의 대명사가 될 수 없다.

법을 실행하는 관료가 어떤 제도를 실행하느냐에 따라, 한 국가의 산업의 발전에 차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물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경쟁력에 양극화가 심각하다.

<그림 16> 한국의 시장 경쟁력과 제도



실물시장에 규제를 담당하는 경제기획원, 지경부, 중기청 등은 세계 일류기업을 만들었다. 반면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부서에는 가장 훌륭한 관료들이 배치되고 권한도 막강하지만, 경제위기의 근원이 되는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되었다. 금융시장에는 세계 일류 기업이 없고, 외국계 금융 기업들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³⁵⁾ 노동시장에서는 외신에서 투쟁적인 모습으로 보도되어, 한국의 미래 노동시장 모습을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 어느 국가나 시대에서 대립적 사회, 정치 관계 속에서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한 것을 보면,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독일, 일본을 보면, 한국의 투쟁적 노조를 볼 수 없다.

각 시장을 관할하는 부처에 따라 그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나 근로자들의 국제

35) 금융기업을 가진 대기업에서는 신년 들어 제조업과 달리 왜 그룹의 금융 분야에서는 일류 기업이 나오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기업과 달리, 한국의 대통령께서 한국경제에서 금융 산업에서 세계적 일류 기업이 탄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도 없고 금융 일류기업을 향해 실행되어가는 모습도 볼 수 없다.

경쟁력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문민정부 이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보려는 대통령이 없었다.

국회는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의 실행은 관료들에게 위탁하고 있어, 시장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반면 대통령은 시장에 관련된 법 실행하는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보좌관이 취약하면 소위 규제이론에서 유명한 ‘포획’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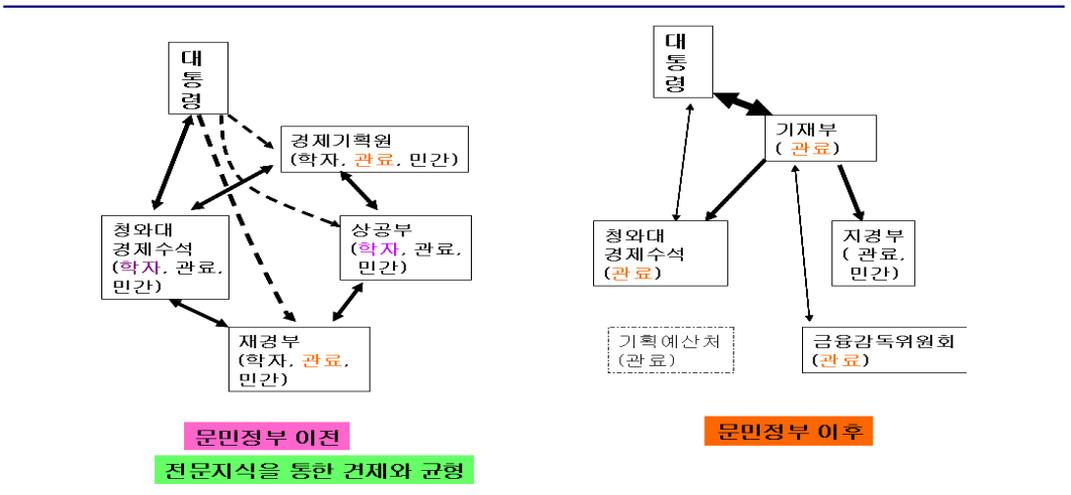
시장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고 운용되므로, 시장 참여자가 가장 겁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법을 실행하는 사람들, 즉 관료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및 노동시장의 후진성의 극복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니면 해 낼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국회가 후진성 극복에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실행을 관료들에게 주문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나. ‘열린 혁신’이 반영될 수 있는 국정운영 조직 재구축

민주화 이전 정부를 군사정권으로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의 역사이므로 좋은 것은 배워야 역사가 바로 선다. 군사정부의 행정부 운용을 보면, 대통령은 제도의 고안 및 실행에서 포획이 되지 않고 소위 ‘열린혁신(open innovation)’이 유입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림 17>과 같이 운영되었다. 내각 구성에 관료-전문직-기업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³⁶⁾, 외부의 전문적 지식이 대통령의 국정에 좀 더 쉽게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17> 문민정부 이전과 이후의 국정운동과 열린혁신의 차이



36) 관료-전문가-기업에서도 관료-전문가 사이가 유착된 관계라면, 전문가와 관료의 제도 고안 및 실행에서의 의 사고체계가 동일하므로 여기서 논의되는 ‘열린 혁신’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그림 17>와 같은 구성에서는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시스템이 나타나지 않는다. 군인들은 참모역할을 해 보면서 성장하고, 장군으로 진급하면 최종 결정은 각 분야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진다. 군인은 참모 조직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만, 문민정부 이후 리더들³⁷⁾은 군인들이 가진 장점을 갖추지 못하였다. 민간 부문 리더들이 군인 조직의 리더에게서 배워야 할 덕목이다.

(3) 재정정책,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금융 규제 및 감독으로 거시경제정책 재구성과 금융제도 개혁의 대통령 역할

Cerra & Saxena(2008)의 연구, ‘시스템적 은행위기(systemic banking crises)’³⁸⁾ 등을 통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사건을 보면, 외환위기, 은행위기, 쌍둥이 위기(외환위기와 은행위기 동시 발생), 내전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발생된다. 이러한 금융시장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근원적 요인은 금융기관(financial institutions)의 과도한 위험 부담에서 발생되므로, 통화정책이 아니라 금융 규제 및 금융감독의 부실에서 발생된다.

Blanchard, et al(2010)은 거시경제정책의 틀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거시경제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이분적 구조가 아니라 “통화정책,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금융규제”로 재구성되어야 하고, 통화정책과 금융규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다른 정부 규제와 달리 거시건전성 금융규제 정책이 통화 및 재정정책과 같은 위상으로 부상되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금융안정(financial stability)을 달성하기 위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감독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지식의 확대와 이를 뒷받침 해 주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다(BIS, 2001; Borio, 2003; Borio & Shim, 2001, 2007; Bank of England, 2009).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규제 중에서 거시건전성 감독정책이 중요한 이슈이다. 거시건전성 감독의 본질은 금융기관의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문제점을 식별하여 금융기관의 취약성을 개선함으로써, 거시경제와 금융부문간 연계 관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위기 진단을 통해 금융규제 제도 개편안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금융감독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어, 금융규제 개편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금융 감독기관 장 들사이에 갈등이 심하게 표출되었다. 각 기관 조직의 감축과 위상이 감독 규정의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은 당연하고 의회에서 로비도 치열하여 속도가 늦어지고

37)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이념이 신념으로 되어 있는 고집이 강한 리더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좋은 의견을 말한다고 해도 쉽게 수용되지 않을 것이다.

38) Laven & Valencia(2008) 참조.

있다.³⁹⁾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리더는 오바마 대통령이였다.⁴⁰⁾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자⁴¹⁾.

금융시스템이 일년전 보다 오늘 훨씬 더 강력해졌지만, 금융시스템은 오늘도 그 자체를 거의 붕괴시켰던 것과 꼭 같은 규칙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개혁에 반대하는 기업들 중에는 과거의 관행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수 없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없고, 규제금융 받은 것에 대해 조세 부담자에게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금융시스템을 개혁해야겠다는 나의 의지는 단지 더 강화될 뿐이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의 개편이 중요한 의제도 등장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와 마찬가지로 최근 추진되는 개편안에서도 대통령의 핵심적 역할은 빠지고 이해관계자인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주로 관여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서도 기획재정부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이 법리적으로 충돌하고, 해당 기관 사이에 의견 조율이 어렵다.⁴²⁾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인 반면,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서로 상충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가 금융부문에서 발생되며 한국은 이러한 금융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아주 낮다. 그리고 경제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에 큰 충격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어렵게 만드는 금융감독 개편안에 대통령의 조정과 비전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MB 정부 하에서도 <그림 17>의 문민정부 이후 열린 혁신이 막혀 있는 국정운영 형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에 비하면, 금융감독 개편안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임기 중 업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4대강 사업 및 세종시 못지 않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보좌관들은 실물경제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금융개혁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 미국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감독 개편에 깊이 관여하여

39) SEC가 CDO 판매에서 발생하 사기 혐의로 폴드만 삭스가 기소되면서 금융개혁 개편안의 추진 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매일경제, 2010.4.19).

40) 미국 못지 않게 한국에서도 금융감독 기관이 갖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이므로 강력한 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강력한 경쟁력을 갖는 금융기관이 탄생한다는 것은 금융기관 경영을 전공하는 전세계 학자들에게는 상식이다(이종욱, 2010). 그러나 학자들도 각 국가의 금융기관의 감독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는 현장에 동행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보통 금융기관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단지 보도 기사를 통해 더 많이 알게 되고, 금감원 고위직-관련 학자들의 관계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권한을 짐작할 뿐이다. “무서운 금감원... 검찰도 못하는 몰래 녹음까지” (한국경제신문, 2010년 4월 14일)를 보면, 검찰 및 경찰 보다 금감원이 가진 막강한 권한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41) “President Obama calls for New Restrictions on Size and Scope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Rein in Excesses and Protect Taxpayers”, The White House, January 21, 2010.

42) 2010년 4월 15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여,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4개 금융 감독 관련 기관의 부기관장간 회동은 비공개로 의견조율을 시도했지만 1시간만에 아무런 결과도 없이 끝났다.

금융관련 정부부처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정책이 되는 금융감독의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관들이 관심이 너무 낮다.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MB정부의 미래 경제성장 원천을 위한 규제 개혁이 실종 되었다고 할 수 있다. MB정부의 금융발전을 위한 제도개혁은 우려할 수준이다.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위기 근원적 예방에 중요한 제도가 되는 금융감독 개편안에 대통령의 역할이 빠지게 되면, <그림 16>과 같은 이해관계가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지만, 국회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고, 국회 구성을 보면 전직 관료의 비중이 민간 금융기관, 한국은행, 시민단체, 중립적인 학자들 보다 훨씬 더 많다.

(4) 정부 부채의 적절한 관리

가. 중앙정부의 부채 관리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절한 관리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과 같이 통화정책이 전혀 효과가 없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정책의 여력⁴³⁾ 확대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에서 정부 부채 증가율이 아주 높아,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MB정부도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정부와 국가를 위해, 경제위기 때 활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남겨 놓아야 하므로, 집권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채 증가 규모를 스스로 자제해 나가야 한다. MB 정부⁴⁴⁾가 경기부양을 위해 활용하게 되는 정부 부채 규모에도 스스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식 (5)와 같은 간단한 기준의 규칙이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구나 제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기에서 재정정책의 효과와 달리, 통상적인 경기불황에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면 불황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커지 않는다

정부 부채 규모가 많고 조달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를 가진 일부 선진국에서는 경제위기 하에서도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였다.⁴⁵⁾ 지나치게 경기순응적 재정정책을 취해 온 동구 체제 전환 국가들은 다른 신흥시장 국가들과 달리 위기 하에서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정부 지출을 감소하고 세금을 증가시켜야 했다. 반면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은 이번 금융위기에 직면했

43) 미국 대통령은 2022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 이를 것이라는 미국 의회 예산국의 전망에 따라 2010년 2월 초당적으로 '재정적자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GDP대비 재정적자를 4.3%에서 3% 이내로 낮추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이 위원회의 당면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는 (5) 식에 재정적자 비중 a 를 축소하여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44) MB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논의는 황성현(2009), 옥동성(2010) 참조.

45) 재정여력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Blanchard, et al(2010) 참조. 미국의 재정 지출 확대 법안은 금융위기로 불황이 시작된지 1년 이후인 2009년 2월에 실행되고, 승인된 정부지출 예산 중 1/2만 2009년말 까지 사용될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을 때 정부 부채 규모가 낮아 적극적 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재정여력이 많은 국가에서는 급정지(sudden stop)가 발생되거나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을 우려하지 않고, 금융위기로 인한 심각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재정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나.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 관리 위한 워크아웃 제도 도입

중앙정부가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는 이상으로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부채관리도 당근과 채찍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행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자치단체가 대부분이다. 재정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5) 식의 기초방정식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방정부 스스로 재정 상태를 건전화 해 나가도록 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다. 지방정부가 국회와 연계해 로비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가 매년 교부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5) 식의 평가 자료와 그 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지금은 그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기간 동안 지방정부 재정을 얼마나 악화시키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5) 식을 적용해 위험 수위에 있는 지방정부는 채찍으로 교부금을 줄이고, 자체 내의 비용 절약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파산 단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의 선거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전문 경영인들을 파견하여 지방정부의 건전성이 회복되도록 해야 한다.

다. 연금 구조 개혁, 복지재정 건전화, 금융구조조정 등의 님비현상 개선

우리 사회에 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이 있지만, 한국의 정치 및 정부에도 NIMBY가 있다. 국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만, 갈등과 반대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재직시절에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다. 연금구조, 복지재정, 금융구조조정 등은 이 분야 전문가들에게는 걱정거리이지만, 대통령, 정부 및 국회에서 보면 NIMBY 분야다. 이 문제들은 대통령이나 개혁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으면,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다.

(5) 직접투자 유치와 지방정부 교부금 인센티브 시스템

외환위기로 5년 동안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국내 자산이 방매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수지가 일정 기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팔 것을 거의 다 팔아친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직접투자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다. MB 정부 이후 직접투자 수지의 적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뛰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기업들이 직접투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무원들도 외국 문화와 외국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종욱·전승철(2007)은 경남 진사 공단 및 경기도 파주 공단의 기업 유치에 성공한 공무원의 성공담에 대한 TV 인터뷰를 보고 떠오른 아이디어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지방자치를 도입한 이후,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적자로 중앙정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성과가 있는 기업에게 교부금을 더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중국 공무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적자인 단체장들은 선진국을 견학할 것이 아니라, 중국 공무원들의 해외직접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당장 성과가 없겠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중장기적인 성과는 거둘 수 있다.

지방재정이 적자인 지방자치 단체로서 해외 직접투자가 어려운 지역은 국내 기업들의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기업을 만나고,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어 모셔갈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알라바마 주 몽고메리에 생산 공장을 짓는 동안, 알라바마주와 몽고메리 시가 현대자동차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도 배워야 한다.

(6) 기업가정신의 격려와 고용창출 중소기업 성장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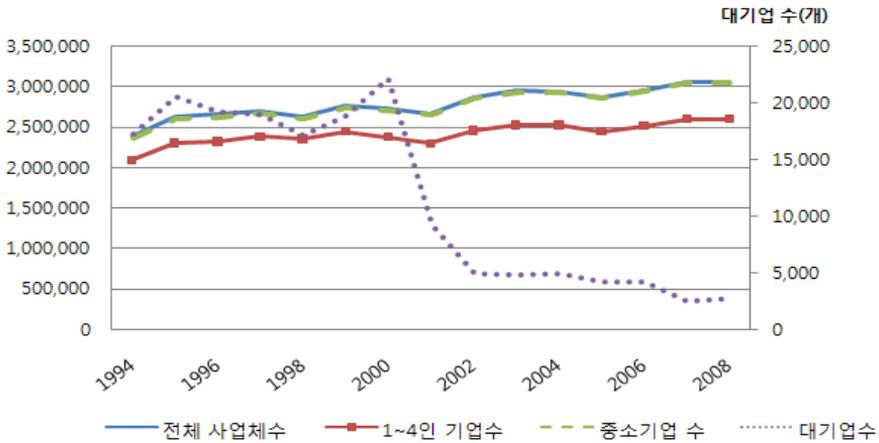
가. 기업가 정신, 고용창출 그리고 국가발전

정부 부문 창출 일자리와 민간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큰 가장 차이가 있다. 민간 기업창업을 통한 일자리에서는 기업이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므로 세수도 증가하여 성장 및 세수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높지만, 정부 창출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성장 및 세수에 기여도가 적다.

<그림 18>에서 한국의 사업체 수 추이의 세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체 사업체 수 추이는 1-4인의 자영업자의 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 수를 보더라도 1-4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 수가 약 85-87% 차지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 수에서 1-4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9% 이르고 있다. 셋째, 대기업의 수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감소하여, 대기업 수가 2000년에 22,512개로 최고에 이르지만 2008년에는 2,788개로 8년 만에 약 88%가 감소하였다.

중소기업 중 1-4인의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추이이지만, 대기업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대졸 졸업생들의 일자리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임금이 높은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서 창출되므로, <그림 18>과 같은 사업체 수의 구조를 보면, 대기업 수의 감소는 한국경제에서 좋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림 18〉 한국의 사업체 수 변화



자료: 통계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기업의 창출 및 기존 기업의 지속성은 활력 넘치는 기업가정신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 제도 개선 및 정부 정책에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기에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림 18>을 분석해 보면, 선진국의 의회가 기업 유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기업가정신’의 연구모임을 구성해야 할 상황이다.

자본평균수익율의 결정방정식 (3)에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정신이 강할수록 자본투입의 기대 평균수익은 감소하게 된다. 안전을 선호하는 위험회피적인 행위가 지배적인 사회일수록, 투자에 따르는 기대 수익도 높을 것이다.

한국의 벤처기업이 감소하고, 우수한 대학의 능력 있는 학생들이일수록 위험회피적인 직업을 선호한다면, 자본에 대한 평균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게 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분야에 도전하여 성공할 수 있는 벤처기업이 성공하려면, 우수한 대학의 능력 있는 졸업생들이 기업가 정신에 더 도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험을 선호하여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에서, 적절한 위험을 선호해 도전해 보겠다는 기업가 정신이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다.

한국의 기업체 수를 보면 기업가 정신을 크게 우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능력이 큰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영업자만 크게 증가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대기업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과 그 파급 효과도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브랜드 평판을 얻는데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는 제품의 세계 표준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제품들 간에 호환성이 없어 다균형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면, 어떤 균형이 선택되는가를 결정하는데 기업의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Katz & Shapiro, 1985). 한국에서

도 세계 표준 경쟁에서 기업의 평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능력이 높은 규모가 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수도 증가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는 어떤 규모의 중소기업이 고용창출 능력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없고, 어떤 특정 규모의 중소기업을 부르는 특유한 용어도 없다. 미국에서는 고용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 규모를 가젤(Gazelle)⁴⁶⁾이라 부르고, 독일에서는 고용창출과 함께 도전정신이 뛰어난 기업을 Mittelstand(한국어로 번역하면 중소기업이지만 독일인에게 주는 의미는 중소기업 이상의 것으로 한국의 중소기업과 질적으로 다름)로 부른다.

위험 회피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당연히 국민의 도전정신은 감소한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도 적을 수 밖에 없다. 한 국가의 중산층은 도전 정신의 보고라 할 수 있지만, 중산층의 위험회피 정도가 높아지면 기업가 정신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의 왕성한 기업가 정신이 쇠퇴해 가고 있다. 도전적 기업가 보다 안정적인 공무원, 공기업 등을 선호하는 위험회피적인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대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으로 성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및 정치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고, 시민단체나 대다수 국민, 그리고 언론, 방송 등에서 이들에 대한 감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중소기업 지원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기업가가 중소기업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 어쩌면 우리의 왜곡된 사고가 중소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물러 있기를 선호하는, 즉 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대기업에 대한 비난과 대기업 소유주의 위법 행위로 인해 대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견이 나오지 않지만, 한국의 미래를 위해 기업성장 과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 대기업도 과거의 위법을 되풀이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중견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우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대기업 협력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은 자연스럽게 커 나가게 된다. 과거에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 보니 정경유착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과거 보다 정치 및 사회가 더 투명해져 가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미래 창업자들도 기업의 아름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하며, 사회의 리더들도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발전의 차이는 기업가정신의 역할의 차이이며, 한국의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더 왕성해져야 하고, 이런 기업가 정신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와

46) 학술적으로는 가젤이 더 많이 이용되지만, 한국에서는 ‘스몰 자이언츠’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몰 자이언츠는 미국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용어가 아니다. 더구나 스몰 자이언츠는 서비스산업에서 강한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책임이다.

나. 상생경영과 기업성장

한국에는 세계시장에서 1, 2등 또는 상위권에 들어가는 대기업들이 많아 그 밑에서 세계 1, 2등의 상위권 중소기업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 그리고 일본의 교토식 경영기업 및 강소기업들의 중요한 수요자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이다. 이런 선진국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급사슬을 이용하는 상생경영으로 세계 1등 기업을 키워야 한다. MB 정부에서는 상생경영의 가치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불행하게도 상생경영이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전되어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한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의 육성 시책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성장하여 대기업이 되고, 고용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들이 나오게 된다. 그 시책으로 상생경영만큼 강력한 경영방법도 없다.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성장의 종착역이 될 수 없다. MB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적극적 정책을 도입하면서도,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왜 표명하지 못하는가? 지경부가 중견기업 육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도, 한국의 기업성장애 대한 사회적, 국민적 인식이란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에는 위협이 많지만, 상생경영을 통해 그 위협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바로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한국의 기업 성장 환경에서는 상생경영만큼 강력한 수단도 없지만, 이 수단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성장에 대한 연구는 상생경영, 즉 기업 생태계를 제외하고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⁷⁾

미래에는 앞선 정권에서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리더가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다. 국회와 정부에 실물시장의 도전적 정신 유입

위험회피적인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정신은 살아날 수 없다. 기업가 정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격려를 받고, 재기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기업가 정신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공무원 기회, 국회⁴⁸⁾ 진출 기회 등이 더 과감하게 주어져야 한다.

47) 대기업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전도사들이 미래 기업의 성장 능력 보다 정태적인 채무상환능력, 이자보상비율 등을 적용하여, 외국인에게 싼 값으로 팔고 부도 처리한 것도 한 가지 이유이다. 또한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적 정서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난 받는 대기업으로 가기 싫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갈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 기업들은 극소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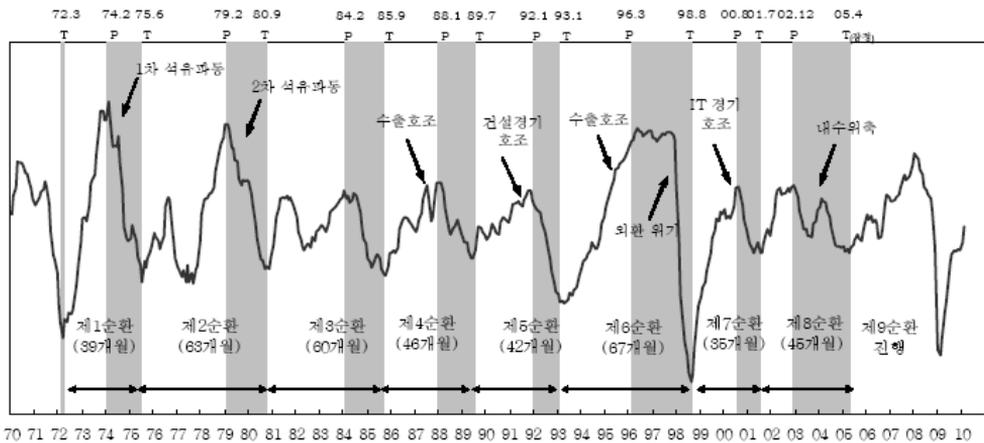
48) 여당에는 관료, 법관 등 위험 회피적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높고, 야당에는 시민단체, 민주화 투쟁 등

도전하는 직군의 사람들이 전문대학원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관료, 법관 등에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강제로 도입된 여성비율과 같은 의무 비율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의 의회에서는 공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의원들의 비중이 너무 높다.

(7) 경기순환주기의 미시적 고찰, 정책 효과 및 경로의 재검토

<그림 19>에서 외환위기 이후, 제7순환과 제8순환의 경기순환 사이클이 제2순환, 제3순환, 제4순환, 제6순환 등 그 이전 대부분의 경기순환 길이 보다 더 짧아지고 있다. 그리고 제8순환에서는 불황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다. 경기변동 순환 주기가 감소 그리고 경기순환 속에서 불황 길이의 확대를 고려해 보면,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전형적인 효과와 경로도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9> 한국의 경기변동과 그 특색



자료: 통계청.

(8) 관료 재직기간 연장 시스템 도입과 관료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도전을 꺼리고 지나친 위험 회피적 행위를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전환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주어야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열린 혁신, 창의성, 생산성 등이 강조되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관료, 법관 등의 직업에서는 능력, 전문성, 열정 보다는 고시 시험의 기수별 장, 차관 승진 여부에 따라 자신의 직업 지속성 여부가 결정된다.⁴⁹⁾ 같은 고시 시험 기수에서 장, 차관이 나오면 동기 기수들은 모두 물러나 산하 기

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국가 성장의 원천인 부가가치 창출과 더불어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는 기업가, 근로자, 전문가들이 국회, 관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다.

관으로 내려가는 관례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혀 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려면, 능력과 경쟁에 따라 승진하여 관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장이 되는 연령을 높이고, 재직 기간을 늘리자. 국장은 52 -60세로 되게 하고, 차관 및 차관보가 58 -62세가 되어도 무방하다. 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어야 하므로, 운에 따라 정치적 관계 및 능력에 따라 승진도 할 수 있다. 국장으로서 해외 학위과정, 해외 국제기관 등의 지식과 경험을 통한 전문성이 잘 갖추어 질 때 국가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승진의 자리가 모자라면, 공무원을 적게 뽑아야 되고,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해 보자.⁵⁰⁾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장관, 차관, 차관보 등에 어느 기수가 가느냐에 따라 동료나 선배들이 나가야 한다면, 관료들의 노동시장이 전근대적이다. 이미 민간기업, 대학 등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조직의 팀제도 도입 등으로 경영층이 되는데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 정부, 법원 등의 전근대적인 노동시장은 구조적으로 변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강성진 (2010),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제58집 제1호, 5-36.

김영생·임찬빈·박승찬 (2009), 『기업의 고용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종철 (2010),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Cross-country 비교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Working Paper 제425호, 3월.

박재민·김선우 (2010), “중소기업 취업자의 직장이동에 관한 연구,”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발표 논문집(한국중소기업학회 홈페이지 참조).

옥동석 (2010),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2010년 제1차 정책세미나(한국경제신문 후원), 3월 26일.

윤석철, 찰스 파인 등 9인 공저 (2006), 『상생경영』, 김영사.

이종욱·전승철 (2007), “한국의 FDI 결정요인과 유치전략: 산업별 통합자료 이용,” 『국제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1-20.

이종욱·남주하·오승현·김정렬·노용환·김상봉 (2009), 『중소기업 금융의 시장실패와 정책적 보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종욱 (2009), “글로벌 신용위기의 한국경제로의 파급메커니즘,” 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 “현 정부 경제정책의

49) 이것이 문제점인지를 퇴직 및 현직 정부 관료와 인터뷰를 해 보면 공감을 가지고 있고, 그 원인으로 구체적 사례까지 설명하였다.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지향하면서, 제1차관, 제2차관을 두게 되는데, 이 두 자리에 고시 기수를 갈게 하면 승진하지 못한 같은 기수의 동료만 사직을 하게 되지만, 이 두 자리에 고시 기수가 다른 분을 임명하게 되면, 동시에 두 기수의 동료들이 전부 사직을 하고, 산하 기관이나 기타 민간 단체로 가야 한다. 차관, 차관보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50대 초반으로 젊어지면서, 50대에 공직을 떠나야 할 관료는 많아지고, 떠나는 관료들이 재취업해야 하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로 인해, 각 부처의 산하단체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므로, 민간에 맡겨도 잘 할 수 있지만 각 부처의 산하 단체가 되는 경제적 편익분석으로 수익성이 맞지 않은 산하단체도 있을 수 있다.

50) 이에 대한 논의는 이종욱(2010) 그리고 한국경제신문의 ‘흔들리는 경제관료’라는 시리즈(2010년 4월 5일-9일) 참조.

- 평가와 향후 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2월 13일.
- _____ (2010),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관료의 역할과 한계 및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 한국경제연구원 공동 주최,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재조명,” 2010년 제1차 정책세미나(한국경제신문 후원), 3월 26일.
- 홍순영 · 이종욱 · 송치승 (2007),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중소기업 금융구조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 황성현 (2009), “이명박 정부 조세 · 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 2월 13일.
- Auerbach, A. (2002), “Is there a Role for Discretionary Fiscal Policy?,” in *Rethinking Stabilization Polic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09–150.
- Bank of England (2009), “The Role of Macroprudential Policy,” Discussion Paper.
- Bernanke, Ben S. (1982), “Nonmonetary Effects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Propagation of the Great Depress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257–276.
- BIS (2001), *Marrying the Macro- and Micorprudential Dimensions of Financial Stability*, March.
- Blanchard, Oliver, G. Dell’ Ariccia, and P. Mauro (2010), “Rethinking Macroeconomic Policy,” IMF Staff Position Note, SPN/10/03.
- Blinder, Alan S. and Joseph E. Stiglitz (1983), “Money, Credit Constraints, and Economic Act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97–302.
- Borio, C. (2003), “Towards a Macro-Prudential Framework for Financial Supervision and Regulation?,” *BIS Working Papers*, No. 128, Feb.
- Borio, Claudio E. V. and I. Shim (2007), “What can Macro-Prudential Policy do to Support Monetary Policy,” *BIS Working Papers*, No. 242.
- Calvo, Guillermo A. (1999), “Contagion in Emerging Market: when Wall Street is Carrier,” May.(Calvo 교수 홈페이지).
- _____ (2002), “Globalization Hazard and Delayed Reform in Emerging Markets,” *Economica*, 1–29
- Cerra, Valerie and S. C. Saxena (2008), “Growth Dynamics: The Myth of Economic Recovery,” *American Economic Review*, 98:1, 439–457.
- Cole, H. L. and Lee E. Ohanian (1999),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from a Neoclassical Perspective,”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Winter.
- Coval, J. D., J. W. Jurek, and E. Stafford (2009), “Economic Catastrophe Bond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628–666.
- David, P. A. (1985), “Clio and the Economics of QWER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332–337.
- Helpman, E., M. J. Melitz, and S. R. Yeaple (2003), “Export versus FDI,” *NBER Working Paper #9439* (AER, 2004 게재).
- Katz, M. L. and C. Chapiro, “Network Externalities, Competition, and Compatib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Vol. 75, No. 3, 424–440.
- Krusell, P., T. Mukoyama, A. Sahin, and A. A. Smith, Jr. (2008), “Revisiting the Welfare Effects of Eliminating Business Cycles,” Dec.
- Kuttner, K. N. and P. C. Mosser (2002), “The Monetary Transmission Mechanism: Some Answers and Further Questions,” *FRBNY Economic Policy Review*, May, 15–26.
- Landes, D. (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ABACUS.

- Lazear, E. P. (2000), "Performance Pay and Product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346–1361.
- Lucas, Robert E., Jr. (1987), *Models of Business Cycles*, Yrjö Jahnsson Foundation, Basil Blackwell Ltd.
- _____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3–42.
- _____ (1993), "Making a miracle," *Econometrica*, March, 251–272.
- _____ (2003), "Macroeconomic Prioritie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14.
- Mukoyama, T. and A. Sahin (2005), "The Cost of Business Cycles for Unskilled Workers," FRB of New York, Staff Reports no. 214.
- N'Diaye, Papa (2009), "Countercyclical Macro Prudential Policies in a Supporting Role to Monetary Policy," IMF Working Paper, WP/09/257.
- North, D. C. and Robert P. Thomas (1973),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rth, Douglass C. (1981), *Growth and Structural Change*, New York : W. W. Norton.
- _____ (1991),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ama (2009), "On 21st Century Financial Regulatory Reform," the White House, June 17.
- Rh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2008a), "Is the 2007 U.S. Sub-Prime Financial Crisis So Different? An International Historical Comparison," K.S. Rogoff 홈페이지(또는 *AER Papers and Proceedings*, 2008).
- _____ (2008b), "This Time is Different: A Panoramic View of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Crises," *NBER Working Paper*, no. 13882, March.
- Rey, H. and P. Martin (2005), "Globalization and Emerging Markets: with or without Crash," *NBER Working Paper*, 11550.
- Romer, C. and D. Romer (2002), "The Evolution of Economic Understanding and Postwar Stabilization Policy," in *Rethinking Stabilization Policy*,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11–78.
- Stiglitz, J. E. and A. Weiss (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rf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393–410.